

AND PEACE
PROSPERITY

2004

통일교육기본지침서

Educational Guidelines on Unification



통일부
Ministry of Unification

머 리 말

본 지침서는 통일교육지원법에 따라 각급 학교 및 사회 통일교육 현장에서 지침으로 활용되도록 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다.

본 지침서는 통일교육의 목표와 과제, 통일교육의 내용체계, 통일교육의 지도원칙과 실천방향, 부록으로 구성되어 있다.

‘통일교육의 목표와 과제’에서는 우리나라의 헌법과 통일교육지원법에 근거하여 통일교육이 지향하고 있는 목표와 실천과제들을 제시하였다.

‘통일교육의 내용체계’에서는 각급 학교 및 사회 통일교육 현장에서 다루어져야 할 주제에 대한 내용 설명과 강조점을 기술하였다.

‘통일교육의 지도원칙과 실천방향’에서는 일선 교육현장에서 통일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는 데 필요한 교수·학습상의 지도원칙과 실천방향, 지도상 유의사항을 제시하였다.

‘부록’에서는 북한정치체제 기구도, 통일교육 지도방법 실제, 현장통일교육 안내, 북한 통일관련 방송프로그램 현황 등을 제시하여 통일교육시 참고가 되도록 하였다.

본 지침서의 위와 같은 내용과 지도원칙들은 통일교육 전문가와 학교, 사회 등 각급 교육현장의 의견들을 반영하여 작성되었으며, 통일교육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었다.

이 지침서가 널리 활용되어 우리 국민들의 올바른 통일의식과 가치관을 정립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통일교육기본지침서



Peace and Prosperity

차 례

I. 통일교육의 목표와 과제	1
1. 통일교육의 필요성	3
2. 통일교육의 목표	5
3. 통일교육의 실천과제	8
II. 통일교육의 내용체계	11
1. 통일문제의 이해	13
가. 분단의 배경과 폐해	13
나. 통일의 의미	17
다. 통일의 당위성	19
라. 통일문제의 성격과 평화정착의 중요성	21
2. 북한의 이해	24
가. 북한에 대한 인식	24
나. 북한의 정치	26
다. 북한의 군사	30
라. 북한의 경제	32
마. 북한의 문화	37
바. 북한의 교육	41
사. 북한주민의 가치관과 대남인식	44
아. 북한주민의 생활	48



3. 북한의 변화	53
가. 내부변화의 양상	53
나. 대남정책의 변화	55
다. 대외정책의 변화	58
라. 북한변화의 의미	60
4. 통일환경의 변화	62
가. 국제질서의 변화	62
나. 남북한 국력 격차의 심화	64
다. 통일환경 변화의 의미	66
5. 남북관계 개선노력 및 국가안보	68
가. 남북관계 개선 노력	68
나. 남북교류협력의 진전	73
다. 국가안보	77
6. 통일국가의 목표와 방향	79
가. 분단국 통일사례의 교훈	79
나. 한반도 통일의 촉진 및 장애 요인	82
다. 우리의 통일방안	85
라. 통일국가의 미래상	88

통일교육기본지침서



Peace and
Prosperity

7. 통일을 위한 준비 자세	90
가. 분단상황 이해와 판단능력의 신장	90
나. 통일에 대한 주인의식과 열린 자세 함양	93
다. 적극적인 통일외지 확립	95
라. 남북한 공존문화 정립	97
Ⅲ. 통일교육의 지도원칙과 실천방향	99
1. 통일교육의 지도원칙	102
가. 객관적 이해와 판단능력 배양의 지도원칙	102
나. 통일 안보관 정립의 지도원칙	103
다. 평화 협력 자세와 통일 실현 의지 함양의 지도 원칙	104
2. 통일교육의 실천방향	106
가. 통합적 교육	106
나. 행동지향적 교육	106
다. 적극적 평화를 지향하는 교육	107
라. 평생교육	107
마. 테크놀로지에 바탕을 둔 교육	108
바. 지식구성활동을 촉진하는 교육	108



3. 지도상 유의사항	110
가. 학교 통일교육.....	110
나. 사회 통일교육.....	116

부 록

북한 정치체계 기구도	123
통일교육 지도방법 실제	128
현장 통일교육 안내	144
북한 및 통일문제 관련 웹사이트	152
북한 및 통일관련 방송프로그램 현황	155
통일교육지원법 및 시행령	156



Peace and
Prosperity

통일교육의 목표와 과제

통일교육의 필요성

통일교육의 목표

통일교육의 실천과제

1. 통일교육의 필요성

통일교육은 통일을 이룩하는 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함양함으로써 통일을 앞당기고 통일이후의 삶을 준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즉, 모든 국민들이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 의식,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통일에 대한 공통의 인식과 태도를 형성해 나가기 위한 것이다.

통일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현재 남북의 분단과 통일에 관하여 국민들간에는 다양한 의견차이가 존재하고 있다. 분단의 고통을 직접 체험하고 6.25전쟁을 겪은 세대와 그렇지 못한 세대간의 시각차가 크고, 지향하는 가치관과 이념에 따라 통일의 방법과 방향이 다르기 때문이다.

통일교육은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여러 시각의 차이를 조화시키고 적절한 합의점을 발견하여, 통일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또한, 통일교육은 통일문제와 관련된 정책과 정보, 자료 등을 국민에게 정확하게 알리고 그 내용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통로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급변하는 남북관계와 통일환경에 대한 이해 도모

1980년대 후반부터 국제적인 냉전체제가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한반도에도 남북한간 화해와 협력을 추구하려는 노력이 가속화되어 왔다.

특히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 이후 이제는 북한을 단순히 ‘적’으로만 인식해서는 변화하는 남북관계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거나 미래를 전망하기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 국민이 통일 과정에서 일어나는 대내외적 통일환경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새로운 통일환경에 적응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분단역사 극복 및 사실상의 통일상태 달성 기여

분단 이후 상호불신과 대립의 상태가 지속되는 가운데 민족의 이질화가 심화되어 왔다. 통일교육은 이질화된 민족분단 역사를 극복하고, 화해와 교류협력을 통해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함으로써 ‘사실상의 통일’ (de facto unification) 상태를 달성하는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민족구성원 전체의 역량 결집 통로

한반도의 통일은 남북한 주민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의 재외동포에게도 매우 큰 의미가 있다. 따라서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재외동포와 남북한 주민 간에 있을 수 있는 입장과 주장의 차이를 통합하고 통일의지를 하나로 결집하여, 새로운 민족공동체를 이루려는 끊임없는 노력과 의지가 필요하다.

이런 면에서 통일교육은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는 우리 민족 구성원 전체의 통일에 관한 역량을 결집하는 중요한 통로이며 유용한 방안인 것이다.

2. 통일교육의 목표

통일교육은 우리 국민으로 하여금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 공동체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 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의 함양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통일교육지원법 제2조)

이러한 통일교육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 밖으로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을 천명한 우리나라 헌법전문과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규정한 헌법 제4조의 정신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또한,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힌 교육기본법 제2조의 정신에 따른 것이다.

이러한 정신을 바탕으로 하는 통일교육은 국민의 통일을 이룩하는 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의 함양을 위해 다음과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다.

가. 통일환경과 남북한 실상에 관한 객관적 이해와 판단능력 배양

사회주의권 몰락 이후 국제사회의 탈냉전 추세가 강하게 나타나고 남북한의 국력 격차는 더욱 커져 왔다. 오늘날 북한은 스스로 인정하는 바와 같이 모든 것이 부족하고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평화통일을 위한 우리의 노력이 더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통일환경의 변화를 정확하게 이해

하고 판단하는 능력을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현재 북한의 대내외적 환경과 실상을 우리의 현실과 비교하여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북한사회에 대한 객관적 인식과 우리의 나아갈 방향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

나아가 대내외 통일환경의 변화와 북한 실상에 관한 객관적 이해를 토대로 남북간 적대와 갈등 구조 속에서도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온 대북정책의 흐름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앞으로 우리가 지향해 나아가야 할 통일노력의 방향과 통일국가의 미래상 등에 대하여도 진지하게 모색하고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야 할 것이다.

나. 자유민주주의와 민족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한 통일·안보관 정립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를 헌법의 기본원리로 채택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는 대한민국의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기본질서 중의 하나이다.

자유민주주의는 통일 이후에도 중요한 기본가치의 하나이다.

우리 헌법에서 규정하는 자유민주주의는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며 민족구성원 모두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자아실현의 기회를 보장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자유민주주의는 통일과정에서는 물론 통일이후에도 기본으로 삼아야 할 가치이다.

우리 민족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공동운명체이다.

민족공동체는 혈연·지연·언어·문화·역사 등과 같은 객관적인 요소와 공동체 의식이라는 주관적 요소가 결합하여 구성된 인간공동체를 말한다. 현재, 우리 민족은 남북분단으로 인해 민족공동체의 역사가 일시적으로 왜곡되는 과정을 겪고 있으나, 수천 년 동안 한민족으로서 공동체를 이루어 온 역사와 전통을 공유하고 있다.

따라서, 통일교육은 남북한이 함께 공유하는 민족공동체 의식에 바탕을 둔 통일관의 정립에 목표를 두어야 한다.

통일과 국가안보는 불가분의 관계이다.

통일교육은 국제적인 탈냉전과 남북간 교류협력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국제적 안보환경의 변화, 한반도의 군사적 대치상황, 북한의 핵문제 등 여러 가지 안보위협 요인이 상존하고 있음을 분명히 인식시켜야 한다. 또한 남북간 교류협력의 심화 및 여러 가지 통일노력은 튼튼한 국가안보를 전제로 이루어져야 함을 가르쳐야 한다.

다. 남북한간의 평화와 협력 자세 및 통일 실현의지 함양

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남북한이 먼저 교류와 화해협력관계를 증진시켜 상호간의 신뢰를 회복하면서 평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분단으로 인해 저하된 민족의 역량을 드높이고, 국제무대에서 한반도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통일을 반드시 실현해야 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함양시켜야 한다.

3. 통일교육의 실천과제

통일교육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각급 교육현장에서 실천해야 할 과제는 다음과 같다.

가. 객관적 북한이해를 통한 남북관계 이해능력 제고

북한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및 주민의 생활상을 통해 북한사회에 대한 객관적 인식 수준을 높여나가야 한다. 북한에 대한 객관적 인식을 통해 대결과 협력이라는 남북관계의 이중적 측면 등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나. 평화통일의 바탕인 국가안보의 중요성 인식

냉엄한 국제질서와 한반도의 군사적 대치상황을 직시하게 함으로써 국가안보가 반드시 필요하며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시킨다. 튼튼한 안보가 뒷받침이 되어야만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고 남북한간에 안정적인 교류협력이 추진되어 평화통일을 이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 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한 남북간 이질성 극복

분단상황의 오랜 지속은 우리 사회의 안정과 발전을 저해하고 남북한간 민족 이질화를 심화시키므로, 언어·경제·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남북한간 상호교류와 협력을 통해 민족의 이질화 현상을 극복해 나가야 한다.

라. 통일문제에 대한 무관심 극복

통일문제에 대한 무관심과 방관적 태도는 분단된 나라의 민족구성원에 게 맡겨진 책임과 사명을 저버리는 것임을 환기시켜야 한다.

분단의 장기화에 따른 민족 동질성의 파괴, 민족사와 전통의 단절가능

성, 이산가족문제 등 시급하고 중대한 당면과제들을 설명해 줌으로써 통일성취를 위한 민족적 소명의식을 고취시켜야 한다.

마. 통일의 당위성 인식과 통일의지 확립

남북 분단과 상호간 대립 경쟁이 민족의 역량과 자원을 낭비하게 할 뿐만 아니라, 민족의 번영과 발전의 장애요인이 되고 있음을 인식시켜야 한다. 우리 민족구성원 모두가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평화적인 방법과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민족이 번영할 수 있는 통일을 반드시 이루어 나가겠다는 사명의식을 고취시켜야 한다.

바. 합리적 토론과 민주적인 절차를 통한 국민적 합의 형성

통일은 합리적 토론과 민주적 절차를 통해 수렴된 국민적 합의를 거쳐 이루어 가야 하므로 개인적 정파적인 이해관계에 얽매여서는 안된다. 따라서 합리적 판단근거를 제시하고 기초정보를 국민 스스로 확인하는 습성을 길러 통일 및 남북관계 개선에 필요한 갈등 해결 및 의견 형성 방법과 태도를 함양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어야 한다.



Peace and
Prosperity

통일교육의 내용체계

통일문제의 이해

북한의 이해

북한의 변화

통일환경의 변화

남북관계 개선노력 및 국가안보

통일국가의 목표와 방향

통일을 위한 준비 자세

1. 통일문제의 이해

가. 분단의 배경과 폐해

(1) 분단의 원인과 성격

통일이란 무엇이고 왜 해야 하며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해하려면, 먼저 우리 민족이 왜 분단되었고 그 분단의 성격은 무엇인지 살펴보아야 한다.

일본제국주의의 식민통치와 미·소의 한반도 분할점령으로 지리적 분단이 이루어졌다.

한반도의 분단은 다양한 요인들이 중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난 현상이지만 그 시작은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통치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이 미·소 연합국에 1945년 8월 15일 무조건 항복을 선언하자, 미국과 소련이 일본군의 무장해제를 명분으로 한반도를 각각 분할 점령했던 것이 이 땅을 지리적으로 분단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즉,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통치와 제2차 세계대전 종결 과정에서 미·소의 이념적 대립에 의한 냉전이 한반도의 분단으로 이어졌던 것이다.

남북이 각각 상이한 정부를 수립함으로써 정치적 분단이 이루어졌다.

분단 이후 미·영·소는 1945년 12월 모스크바 삼상회의에서 미·영·소에 의한 한반도의 신탁통치를 결의하였다. 이 사건을 계기로 남북한에서는 신탁통치 찬반 논쟁이 일어났고 북한을 중심으로 한 좌익 공산주의진영과 남한을 중심으로 한 우익 민족주의진영 사이에 계급적·이념적 대립이 심화되었다.

1948년에는 남과 북이 각각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두 개의 상이한 정부를 수립함으로써 정치적 분단에 이르게 되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국제연합(UN)이 감시하는 선거로 구성된 ‘한반도에서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승인을 받은 반면, 북한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1991년 남북한이 국제연합(UN)에 동시가입하기 전까지는 국제적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6.25전쟁으로 심리적 분단이 심화되고, 그 결과 분단이 고착되었다.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남침으로 인한 6.25전쟁 발발은 같은 민족끼리 싸우는 민족의 비극을 초래함으로써 민족구성원 상호간에 증오와 적개심을 갖는 심리적·문화적 분단으로 이어졌으며, 이로 인해 분단은 더욱 심화되었다.

분단이 이렇게 복합적 원인과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것은 분단을 해소하는 통일이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님을 시사한다. 따라서 우리민족이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민족 내부적으로 심화된 분단구조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한반도 통일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과 협조를 얻는 것이 필요하다.

| 이 주제를 다룰 때의 강조점 |

한반도의 분단은 타율적 요인에 의해서 초래되었지만 민족내부의 갈등과 대립으로 더욱 심화되었다는 역사적 교훈을 거울삼아 먼저 우리 내부의 세대간 지역간 통합과 남북간의 화해와 협력을 도모하는 길이 분단을 해소하는 지름길임을 환기시켜야 한다.

분단은 복합적이고 중첩된 과정을 거쳐 형성되었기 때문에 분단극복을 위한 통일과정도 역시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임을 인식시키고 접근하기 쉬운 문제부터 해결해 나가야 함을 인식시킨다.

(2) 분단의 피해

분단은 개인적 차원에서 고통과 희생을 강요하고, 민족적 차원에서 소모적인 체제 및 군비경쟁으로 인해 민족의 역량을 낭비함으로써 민족의 공동번영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분단은 남북간에 적대적인 대결체제를 지속시킴으로써 평화적이고 자주적이며 자유롭게 살아야 할 우리 민족의 삶을 제약해 왔다. 또한 자유와 민주주의를 속박하고 평화롭고 창의적인 민족의 삶을 펼칠 기회를 제한함으로써 남북한 모두의 사회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전반에 걸쳐 삶의 질을 균등하게 고양시키는 것을 총체적인 사회발전이라고 규정할 때, 분단은 이러한 발전을 가로막은 심각한 장애물이라고 할 수 있다.

분단은 한반도에 권위주의적 독재정권이 형성 유지되는 데 중요한 작용을 했으며, 남북간의 소모적인 군비경쟁을 유발시켜 경제발전에도 많은 제약이 가해졌다. 특히, 북한은 독재정권과 선군정치 등으로 이런 현상이 더욱 심화된 채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또한 분단은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위상을 약화시키고, 동북아시아 지역의 안정과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렇듯 분단은 현재 우리의 삶을 왜곡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분단으로 인해서 우리가 치르는 부정적인 대가를 ‘분단비용’이라고 할 때, 그 동안 누적된 분단비용은 엄청나다 할 수 있다. 분단 해소 과정은 바로 이러한 분단비용을 줄여 가는 과정이다.

‘분단비용’은 남북한간 체제경쟁과 대립으로 인해 필요 이상으로 지불해야 하는 체제유지비, 군사비 등과 같은 유형의 비용과 이산가족의 고통, 국제무대에서 한민족의 위상 저하 등과 같은 무형의 비용을 다 포함하는 것이다.

| 이 주제를 다룰 때의 강조점 |

분단의 장기화가 오늘날 개인의 삶과 민족 전체의 발전에 미치고 있는 부정적 영향과 결과들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일깨워 준다.

분단으로 인해 초래되는 불필요한 민족적 역량의 소모가 21세기 정보화 지식산업화시대의 국제사회에서 한민족의 역동적 발전을 저해할 수 있음을 깨닫도록 한다.

분단으로 인한 이산가족과 실향민들의 아픔을 이해하게 하고, 나아가 이산가족 재회를 위한 해결방법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한다.

나. 통일의 의미

통일은 우리 민족 구성원 전체가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 조화롭게 살아가는 상태를 말한다.

통일의 의미는 사람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규정할 수 있으나, 여기서는 “우리 민족이 나뉘어 서로 다른 체제에 속해 살면서 형성된 적대적인 관계를 극복하고, 하나의 민족공동체를 이루어 조화롭게 살아가는 상태”라고 규정하고자 한다.

통일은 분단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역사의 길을 걷고 있는 남북의 민족구성원이 현재의 조건과 상황을 고려하여 다시 새로운 하나의 공동체 사회로 발전해 나아가는 창조적 과정을 의미한다.

정치·경제·문화·사회 등 모든 면에서의 발전된 통합을 의미한다.

통일은 지리적으로 국토를 하나로 통합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정치적으로는 선진화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확립하는 것이고, 경제적으로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를 실현할 수 있는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며, 분단으로 이질화된 문화를 한 차원 높은 한민족의 문화로 승화시키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남북한 주민이 사회심리적으로 ‘우리는 한민족, 하나의 국민’이라고 느끼게 되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이렇듯 통일은 모든 방면에서 남북의 주민이 다양성에 기초하여 동질적인 삶의 양식과 정신문화를 공유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통일은 지속적인 발전과정이다.

그러나 통일의 개념을 완전한 의미의 통일국가 형성 단계에 국한해서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제도적으로 하나를 이루는 완전한 통일을 이루기 이전에도 민족의 동질성 범주를 확대하고 사실상 통일상태를

이루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이다.

통일을 ‘실현’ 과 ‘미실현’ 의 이분법 개념으로 규정하기보다는 “지금은 통일이 몇 % 이루어진 상태”라는 식의 지속적인 발전 과정으로 파악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사고일 것이다.

이렇게 보면, 남과 북이 상호 적대성을 해소하고 평화정착을 실현하여 국가연합 형태의 남북연합을 형성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과도기적 단계의 통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통일은 남북의 평화정착 노력을 통해 이루어가는 점진적 · 단계적인 과정이다.

통일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이 자주적 · 평화적 · 민주적으로 이룩하는 것이다. 또한 통일은 남북이 평화를 정착해 가는 과정에서 점진적 · 단계적으로 달성해 나가는 것이다.

통일을 이루려면 먼저 우리 사회 내부에서 국민적 합의기반을 조성한 후 남북간 화해협력을 통해 상호 신뢰를 구축하고, 민족동질성을 회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동시에 안보위협을 해소함으로써 남북한 사이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나아가 통일에 유리한 국제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 이 주제를 다룰 때의 강조점 |

완전한 통일을 이루는 과정에 과도기적 단계의 통일이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한다. 다만 과도기적 단계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이 단계를 거쳐 점진적으로 완전한 통일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는 점을 설명한다.

설령 국가 체제가 분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민족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을 고양하고 남북한의 교류와 협력의 확대를 통해 평화공존을 제도화함으로써 사실상의 통일상태를 이룰 수 있음을 강조한다.

다. 통일의 당위성

통일은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

분단으로 굴절된 한민족의 역사적 정통성 회복

우리 한민족은 반 만 년의 유구한 역사적 전통을 이어왔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의 종식과 함께 미국과 소련에 의해 인위적으로 분단된 이후 50여년간 지속된 단절은 오랜 기간동안 단일민족국가를 이루어 왔던 우리민족의 역사적 정통성을 약화시켜왔다. 통일은 이처럼 분단으로 인해 훼손된 한민족의 역사적 정통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

이산가족의 고통해소 및 민족경제의 발전

남북 이산가족의 고통과 한을 해소하는 것은 인도적 차원에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이며 인간의 기본적 권리를 실현하는 길이다. 아울러 통일은 한반도에 단일경제권을 형성함으로써 인적·물적 자원을 확대시키고 내수시장을 키울 뿐만 아니라, 우리의 활동무대를 한반도 전역으로 넓혀 대륙과 해양을 연결함으로써 막대한 경제적 실리를 가져다 줄 수 있다.

이와 같이 사회 경제적 측면에서 우리 민족이 21세기 선진민족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상호불신과 갈등, 반목과 대결을 조장하고 민족 역량을 낭비케 하는 분단을 극복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단일 민족공동체로서의 국제적 위상과 영향력 제고

통일국가의 실현은 우리 민족의 역량을 결집시킴으로써 우리 민족의 번영과 발전을 한층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통일국가의 실현을 통해 결집된 민족의 역량은 우리의 국제적 지위와 영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동북아 지역 질서 확립에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인류의 공동번영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한반도의 전쟁위협 해소 및 동북아 지역의 평화에 기여

한반도는 아직도 분쟁과 전쟁의 위협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태에 놓여 있으며, 불안한 정세로 인해 남북한 발전의 장애요인이 되어 왔다. 이러한 발전의 장애요인과 정세 불안정을 제거하고, 경제적 번영과 민주정치 발전의 기회를 되찾아 자유 복지 인간존엄성이 구현되는 선진민주국가를 실현하기 위해서 통일은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

또한, 한반도 통일은 동북아시아 지역의 안정과 세계평화에도 크게 기여하게 된다

| 이 주제를 다룰 때의 강조점 |

분단으로 인하여 나 자신은 어떤 제약을 받고 있는가, 통일이 나에게 가져다 줄 혜택과 이익은 무엇인가 등의 질문을 통해 통일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자신의 삶과 연계해 생각하도록 한다.

통일국가를 이룩할 때 얻게 되는 가치와 이점을 제시함으로써 통일을 반드시 이룩해야 하는 이유와 중요성을 이해시킨다.

라. 통일문제의 성격과 평화정착의 중요성

(1) 통일문제의 성격

민족 내부분제인 동시에 국제문제라는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

한반도의 분단은 제2차 세계대전의 종식과 함께 미·소의 한반도 분할 점령으로 시작되었다. 그리고 북한의 도발에 의한 6.25전쟁으로 민족의 내부분열이 심화되었으며, 한반도의 지정학적 중요성으로 인해 주변국의 세력균형을 위한 역학관계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이로 인해 통일문제는 기본적으로 우리 민족의 내부 문제인 동시에 국제 문제라는 이중적인 특성을 띠고 있다.

이는 한반도의 평화공존과 통일문제가 남북한간의 주도적 해결노력과 함께 미국을 비롯한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국들의 지지와 협력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통일에 대해 남북한과 주변국들의 입장이 같지 않을 수 있다.

주변국의 한반도에 대한 관심과 우리의 관심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와 주변국가의 관심이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바라고 있는 점에서는 일치하나, 통일의 미래상과 관련해서는 나라마다 입장이 다를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한반도 통일이 당연한 것이며 통일이 주변국의 실리에 부합됨을 주변국가들에 잘 이해시켜 그들 스스로 한반도 통일을 지원하고 협조하도록 여건을 만들어 가야 한다.

결국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통일을 이룩하려면 남북관계를 우리 입장에서 주도할 수 있도록 국민의 역량을 결집시키고 적극적인 외교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이다.

(2) 평화정착의 중요성

한반도의 평화정착은 통일을 이룩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평화가 전제되지 않는 통일노력은 민족의 불행 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평화정착은 전쟁방지만이 아니라 남북한의 번영과 복지수준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

평화정착 노력은 단지 남북간의 전쟁을 막는 데만 국한되지 않고, 남북한이 함께 번영을 누리고 복지 수준을 향상시키는 차원에서도 중요하다. 남북간에 평화가 정착되면 체제경쟁에 따른 비용을 줄일 수 있고, 그 절감된 비용을 활용하여 남북한 주민의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평화정착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실천과제는 남북한간의 적대관계를 해소하는 것이다.

남북한간의 적대성을 해소하고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7.4 남북 공동성명(1972. 7)」과 「남북기본합의서(1992. 2)」, 그리고 「6.15 남북공동선언(2000. 6)」에서 합의된 남북화해, 남북불가침, 남북교류협력 등의 기본합의 내용을 실천해 나가야 할 것이다.

남북한간의 적대관계 해소는 정치 군사적으로 정전체제를 남북한간의 협상에 의해 평화체제로 전환함으로써 상호 군비통제와 군비축소를 실현해 나가며, 경제 사회적으로는 남북간에 호혜적 관계를 구축하고, 남북한 주민이 자유롭게 왕래하고 서로 돕고 나누며 더불어 살아가는 민족공동체를 형성해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평화정착은 「사실상 통일」상태를 실현하는 필요조건이다.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통해 남북간에 적대적 관계를 해소함으로써, 상호이해의 폭을 넓히고 민족동질성이 회복되는 「사실상 통일」 상태를 실현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남북간에 지속적인 평화가 정착되어야만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통일정책은 평화정착을 기조로 하여 추진되어 왔던 것이다.

| 이 주제를 다룰 때의 강조점 |

통일문제의 이중성을 이해시킴으로써 통일이 우리 민족의 결집된 노력과 함께 주변국들의 지원과 협조를 통해 가능함을 인식시킨다.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해서는 남북한간의 적대성 해소가 가장 큰 과제이므로 남북간 적대성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여 보도록 지도한다.

남북한이 적대관계를 해소하고 평화를 정착시켜 나가는 것이 「사실상의 통일상태」와 통일로 나아가는 필수조건임을 강조한다.

2. 북한의 이해

한반도에서 냉전을 종식하고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남북한이 서로 화해협력하면서 발전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사회에 대한 객관적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북한의 정치·군사·경제·문화·교육과 북한주민의 가치관, 생활상 등을 통일교육의 중요한 내용으로 삼아야 한다. 특히 남북관계 차원에서 통일의 동반자이자 현실적 위협인 북한을 어떻게 인식해야 하는지 방향을 제시하여야 한다.

가. 북한에 대한 인식

(1) 남북관계에서 북한의 이중적 측면

북한에 대한 올바른 지식체계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북한의 현실과 남북관계에서 우리가 처한 현실에 기초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북한사회의 현실에 대한 객관적 이해를 바탕으로, 남북관계에서 북한이 현실적 위협임과 동시에 통일의 동반자라는 이중적 측면이 있음을 이해하여야 하는 것이다.

(2) 북한에 대한 인식자세

남북관계에 있어서 북한의 이중적 측면에 대한 균형적 인식이 필요하다.

북한의 현실적인 군사적 위협에만 주목할 경우 남북한 적대관계를 해소하기 어려우며, 반대로 통일의 동반자라는 당위론적 인식만 강조하게 되면 남북관계의 현실을 경시하는 통일지상주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 사회에 대한 객관적 인식 수준을 계속 높여가야 한다.

현재 북한 정보들은 북한의 공식 문헌과 발표, 그리고 북한이탈주민들

의 체험과 방북자들의 증언에 기초하고 있다. 그런데 북한 당국의 공식 문헌과 발표는 현실과 괴리되어 있고, 북한이탈주민 방북자들의 체험담과 증언은 사실적이긴 하지만 지엽적이어서 북한사회를 전반적으로 이해하는 데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정보 원천의 특성과 한계를 고려한 나름대로의 분석과 판단으로 북한 사회에 대한 객관적 인식수준을 계속 높여가야 하며, 자유·평화·인권 등 보편적 가치기준에 비추어 비판적으로 재해석하려는 노력이 요청되어 진다.

북한의 개방·개혁 및 변화를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차원에서 북한사회를 바라보아야 한다.

최근 북한의 정치적·경제적 위기상황이 심화되는 가운데 북한은 생존 전략차원에서 변화를 시도하고 있으므로, 북한이 대결적 자세를 버리고 민족공동번영의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해 나가야 한다.

| 이 주제를 다룰 때의 강조점 |

북한사회에 대한 객관적 이해를 통해 북한사회의 실재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남북관계에서 북한이 현실적 위협이자 통일의 동반자라는 이중성을 이해시키고 북한에 대한 객관적 인식 수준을 계속 높여갈 수 있도록 지도한다.

북한에 대하여 균형적 시각을 유지하되, 북한의 안정적 변화를 유도하는 방향에서 북한 사회를 바라볼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간다.

나. 북한의 정치

(1) 북한의 정치이념

북한 정치는 최고권력자를 정점으로 전체 사회가 일원적으로 정치철학과 통치이념을 실천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북한은 사상과 정치의 선도적 역할을 강조한다.

북한의 정치이념은 주체사상이다.

북한은 주체사상을 정치·경제·사회·문화·군사·외교·통일 등 모든 부문에서 유일한 지도이념으로 삼고 있다. 조선노동당 규약 전문은 “조선로동당은 오직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주체사상, 혁명사상에 의해 지도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북한 헌법 제3조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람중심의 세계관이며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사상인 주체사상을 자기 활동의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북한에서 발간한 「위대한 주체사상 총서(철학적 원리)」에 의하면 “주체사상은 원래 김일성과 김정일의 혁명사상의 진수를 이루는 사상만을 의미하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김일성과 김정일의 혁명사상 전반을 의미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주체사상은 상황 변화에 따라 전개되는 북한의 체제유지 이데올로기이다.

주체사상은 ‘김일성-김정일 혁명사상’으로서, 고정불변의 사상이론체계가 아니라 상황에 따라 조금씩 그 내용을 달리하고 있는 북한의 통치 이데올로기이다. 따라서 주체사상은 일관된 사상체계를 갖춘 사회주의 공산주의 혁명과 건설에 관한 이론이라기보다는 국내외적 상황 변화에 따라 새롭게 전개되는 북한식 체제유지 이데올로기라 할 수 있다.

사회주의권 붕괴 이후 북한은 주체사상을 “혁명의 지도사상이며 ‘우리식 사회주의의 사상적 기초’라고 주장하면서, “사회주의는 지키면 승리이고 버리면 죽음이다.”라는 구호 아래 수령과 당의 영도 강화를 통한 체제유지에 주력하고 있다. 그러나 주체사상은 당초의 성격과는 달리 후계체제 구축에 이용됨으로써 북한정치의 파행을 초래하였고, 사회발전의 동인을 상실하게 하는 부정적인 결과를 야기하여 왔다.

북한의 ‘우리식 사회주의’는 동구권이 몰락하고 소련이 해체되자 엄청난 충격을 받은 북한이 사회주의 몰락으로 이어지는 도미노 현상을 차단하고 변화의 물결이 북한사회에 침투하지 않도록 주민들을 단속하기 위하여 내놓은 주체사상의 하위통치이념이다.

(2) 북한의 정치체제

북한의 정치체제는 ‘수령중심의 당·국가체제’이다.

북한의 정치체제는 집단주의 원리와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에 입각한 ‘수령중심의 당·국가체제’이다. 일반적으로 프롤레타리아 독재체제는 당, 국가, 외곽단체 등으로 구성된다. 당은 프롤레타리아 독재체제에서의 지도적 역할을 수행하며, 국가기관은 당의 노선과 정책을 집행하고 당과 대중을 연결하는 매개체로서 균중을 교양하고 당정책의 관철을 위해 균중을 조직 동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그리고 외곽단체는 각계각층의 광범한 균중을 조직화, 의식화하여 당을 중심으로 단결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

조선노동당은 북한체제의 핵심적 기구이다.

북한의 권력구조에 있어 조선노동당은 모든 권력의 원천이고 중핵이다. 북한에서 당의 영도적 역할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로동당의 영도 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한다.”고 명문화한 헌법 제11조를 통해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김일성-김정일로 이어지는 유일체제의 핵심기구도

바로 조선노동당이다.

조선노동당의 외곽단체로서는 우당(友黨)과 근로단체들이 있다. 우당은 조선사회민주당과 천도교청우당이 있지만 이들의 영향력은 거의 없으며 조선노동당이 유일한 지배정당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조선노동당의 최고지도자(총비서)는 당을 중심으로 국가기관과 군대를 통솔한다. 즉, 조선노동당은 사회주의헌법에서 최고주권기관이며, 유일 입법기관으로 규정된 최고인민회의를 비롯한 내각과 사법기관 및 인민군을 영도할 뿐만 아니라 모든 주민들을 지도하고 있다.

국가기관은 당이 제시하는 방향에 따라 정책을 집행하고 하위기관과 인민을 지도 감독한다.

북한의 통치체제에서 국가기관은 입법기관(최고인민회의), 행정기관(국방위원회, 내각), 사회안전기관(인민무력부, 국가안전보위부, 인민보안성), 재판검찰기관(중앙재판소, 중앙검찰소)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권력기관들은 당이 제시한 방향에 따라 정책을 집행하고 하위기관과 인민을 지도 감독한다

북한은 1998년 9월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1차 회의에서 헌법을 개정하여 국가주석제를 폐지하고 내각제를 부활시킴으로써, 형식적으로는 국가 통치권력의 기능적 업무분담을 제도화하였다. 즉, 국방사업은 국방위원회 위원장(국가최고직책, 김정일)이, 대외사업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명목상 국가대표)이, 그리고 행정경제사업은 내각 총리(정부대표)가 각각 분담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북한의 국가최고직책이 국방위원회 위원장이라는 것은 군을 중시하는 정책이 반영된 것이다.

국가최고직책인 국방위원회 위원장은 헌법상으로는 일체의 무력을 지휘통솔하며 국방사업 전반을 지도하는 직책이지만(헌법 제102조), 실질적으로 국가기관을 영도하는 김정일이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기때문에 국방위원장직이 “나라의 정치·군사·경제 역량의 총체를 통솔 지휘하는 국가최고의 직책”이다. 북한의 국가최고직책이 국방위원회 위원장이라는 것은 군사중심의 체제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외교적인 관례상 국가를 대표하여 다른 나라 대표의 신임장·소환장을 접수하는 임무를 담당하고 있다. 그리고 내각 총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를 대표함으로써 북한의 행정부를 이끌면서 행정 경제사업 전반에 대한 책임을 지고 경제를 활성화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이렇게 볼 때 현 단계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전반적 권력구조는 사상과 정치사업, 기본정책 수립, 군과 정권기관, 근로단체 등은 조선노동당에 의해 지도되고 있으며, 국방사업에 대한 일반적 관리는 국방위원회가, 행정 경제사업은 내각이 분담하고 있다.

| 이 주제를 다룰 때의 강조점 |

우리와 다른 북한의 정치 구조와 실제 정치 과정을 설명하고, 남북간의 차이점을 비교한다.

북한의 주체사상의 내용과 실체적 성격, 그리고 통치이념의 변천과정을 이해하도록 설명한다.

북한 권력구조의 특징을 ‘수령 중심의 유일체제’와 ‘당·국가체제’의 논리에 따라 설명하고, 헌법에 규정된 명목상 국가대표와 실질적 국가최고권력자의 차이를 알아보도록 한다.

다. 북한의 군사

‘국방에서의 자위’ 원칙에 따라 4대 군사노선을 채택하고 통치방식으로 선군정치를 표방하고 있다.

북한은 1962년 4대 군사노선을 채택한 이래 현재까지 군사력 증강에 박차를 가해 왔다. 북한 헌법 제60조는 “국가는 군대와 인민을 정치사상적으로 무장시키는 기초 위에서 전군 간부화, 전군 현대화, 전민 무장화, 전국 요새화를 기본내용으로 하는 자위적 군사노선을 관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군부를 체제유지의 최후의 보루로 간주, 통치방식으로 ‘선군(先軍)정치’를 표방하고 있다. 선군정치란 “군사 선행의 원칙에서 혁명과 건설에 나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군대를 혁명의 기둥으로 내세워 사회주의 위업 전반을 밀고 나가는 정치방식”을 의미한다.

북한은 지속적으로 군사력을 증강시키고 있다.

북한은 100만명이 넘는 정규군은 물론 대규모의 예비병력을 보유하고 있다. 북한은 현재 14세부터 60세까지 인구의 약 30%를 예비병력으로 동원하고 있는데, 이들은 예비전력이지만 우리와 달리 현역 군부대나 다름없는 무기체계와 조직을 가지고 있다.

또한 1962년 채택된 4대 군사노선을 구현한다는 목표로 국민총소득(GNI)의 20~25%를 군사비로 사용해 왔으며, 1990년대 이후 심각한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25~27%까지 사용해 왔다.

북한은 휴전 후부터 무기의 자급자족을 위해 많은 군수공장을 건설하는 등 군수산업의 발전에 치중해 왔다. 그 결과 북한은 일부 전자 및 정밀유

도무기, 고도의 항공장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무기를 자체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와 함께 북한은 그동안 미사일 등 각종 전략무기를 개발 배치하여 이미 독자적인 전쟁수행 역량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심각한 경제난 속에서도 세계 5위의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평양-원산선 이남 지역에 지상군 전력의 70% 이상을 집중 배치하여 언제든지 기습공격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군사력은 계속되는 경제침체와 정밀기술 과학의 후진성으로 인해 전투장비 노후화 및 성능의 열세, 에너지난으로 인한 훈련부족 등으로 전투능력 향상에 장애요인을 안고 있다. 북한은 심각한 경제난으로 장기전을 수행하기에는 경제적 한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방대한 군사력을 전진배치하고 있으며, 대량살상무기 보유와 핵무기개발을 시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2002년 10월 이후 북한이 핵무기보유 가능성을 시사함에 따라, 한국의 국가안보 및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커다란 요인으로 대두되었다.

| 이 주제를 다룰 때의 강조점 |

북한사회가 4대 군사노선을 채택하고, 주민 대부분을 군사조직의 예비 전력으로 활용하고 있는 상황을 설명한다.

북한은 재래식 무기, 대량살상무기의 개발 등 여전히 막강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우리의 심각한 안보위협 요인이 되고 있음을 강조한다.

라. 북한의 경제

북한은 분단 이후 현재까지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를 유지하면서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과 중공업 우선의 군산(軍産)복합체 경제운용을 추구해 왔다.

사회주의 계획경제는 모든 생산수단을 국가와 사회협동단체가 소유하고, 생산과 분배를 계획에 의해 조절 통제하는 경제운영방식이다. 북한이 표방하고 있는 자립적 민족경제는 생산의 인적·물적 요소를 자체적으로 조달하고, 모든 경제활동을 자급자족적으로 실현하는 경제체제를 의미하며 이것은 주체사상에 근거한다.

그리고, 중공업 우선의 군산복합체는 경제의 물적 토대를 중공업 개발에 두고 이를 기반으로 경공업, 농업 등 경제 전반의 발전을 도모하는 불균형 개발방식이며, 혁명과 경제건설을 함께 달성할 목적으로 군수용과 민수용 생산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생산방식을 의미한다.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비효율성으로 인해 북한경제는 생산성 저하와 경제 부문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비효율성은 동구권과 구소련의 붕괴로 입증되었다. 북한도 구사회주의권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모든 경제활동을 계획경제체제로 운영함으로써 급변하는 경제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해 경제의 비효율성이 심화되고 있다. 이것은 개인의 소유를 극도로 제한함으로써 개인의 창의성을 억제하고 경제적 인센티브를 유발하지 못하는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의 근본적인 모순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계획경제는 가격이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자율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중앙당국에 의해 인위적으로 결정됨으로써 상품가치와 공식가격간에 왜곡현상이 발생하고, 자원배분이 인위적으로 행해짐으로써 경제의 불균형이 구조적으로 심화되었다.

북한경제는 내각에서 관리하는 민수경제(제1경제)와 군부에서 관리하는 군수경제(제2경제)로 엄격히 구분되어 있다. 국가경제 전체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군수경제가 자원배분에서 최우선시 되기 때문에 민수경제부문은 자원부족과 분배의 왜곡을 겪을 수밖에 없다. 여기에 최고지도자의 교시에 의한 인위적인 자원배분까지 개입함으로써, 북한경제의 비효율성과 왜곡이 가중되었고 계획경제 자체의 마비를 초래하였다.

한편 북한은 부존자원이 풍부하지 못한 상태에서 무리한 중공업 우선의 불균형 발전전략을 추구함으로써 산업의 유기적인 연계를 약화시키고 남아있는 부존자원까지 고갈시키고 있다.

에너지 부족과 식량난으로 경제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1990년대 초부터 지속되고 있는 북한 경제난의 악순환 구조는 에너지 부족과 식량난에서 비롯되었다. 사회주의권 붕괴로 에너지와 식량을 국제시장에서 금이나 달러같은 경화결제를 통해 직접 조달해야 했기 때문에 북한의 외화수요는 이전보다 훨씬 증가되었다. 그러나 내수 중심의 경제구조로는 많은 외화를 획득할 수 있는 수출상품을 만들 수 없었고, 이로 인한 외화결핍으로 석유 등 에너지자원을 충분히 수입하지 못함으로써 전력의 공급이 급격히 악화되고 공장의 가동률은 30% 이하로 크게 떨어지게 되었다. 또한 북한경제 전반에 원 부자재 부족을 초래하였고, 생산설비의 노후화를 가속시켰다.

북한은 전체 식량 소요량의 30%를 외부에서 조달하여야 하는데, 외화 부족으로 수입이 여의치 못함으로써 심각한 식량난에 봉착하게 되었다. 더욱이 1995년 이후 3년간 연속된 자연재해로 자체 생산량까지 급감하였다. 북한주민들은 개별적으로 식량난을 해결하기 위해 직장을 이탈하거나, 생존을 위해 불법적인 경제활동까지 서슴지 않게 되었다. 그 결과 공

장들은 노동력 이탈과 에너지 및 원자재 부족 등으로 인하여 가동률이 현저히 저하되었다.

직장에서 이탈한 주민들은 ‘장마당’에서 대부분의 생필품을 조달하였으며, 공급부족으로 인한 물가상승은 국정가격을 사실상 무의미하게 만들었다. 주어진 임금으로 생활이 불가능하게 되자 암시장은 더욱 확산되었고, 결국 북한화폐는 본래의 교환기능을 상실하게 되었다.

대내외적으로 경제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김일성 주석 사망 이후 북한은 ‘고난의 행군’이라는 구호 아래 경제난 극복에 주력해 오다가, 1998년부터는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을 내걸고 있다. 사상 및 군사강국은 이루었다고 주장하면서 이제는 경제강국을 건설하자고 촉구하고 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현 시기에 제일 긴급하게 풀어야 할 것은 식량 문제”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것은 북한이 경제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런 취지에서 북한은 헌법에 외국 자본의 투자를 받아들이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북한산업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연합기업소의 운영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취하면서 기업의 효율적 운영을 강조하고 있다. 내부적으로는 생산현장을 이탈한 노동자들을 복귀시키고 있으며, 중소형 발전소 건설 등을 통해 에너지 조달을 강화하고, 농지개간을 통해 식량증산을 독려하고 있다.

북한은 미국·일본과의 관계개선을 추구하며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유럽 각 국과의 수교를 맺으면서 대외개방을 확대하고 있다. 2001년 신년 공동사설을 통해 “과거의 낡은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자”는 ‘신사고’를 강조하면서, 정보기술(IT) 분야의 발전에 강한 의욕을 보이고 있다. 기존에 발전된 중공업을 기반으로 정보기술 분야

를 발전시켜 압축성장을 달성함으로써 빠른 시일 내에 사회주의 경제강국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2002. 7. 1에 ‘경제관리개선조치’를 시행하였고, 신의주·개성·금강산 특구 등을 지정 발표하였다.

북한은 경제관리방식에서 효율성 및 수익성에 기초한 실용주의에 중점을 두고 생산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경제관리 개선조치’를 시행하였다.

‘경제관리 개선조치’는 기업의 경영자율권 확대, 노무관리 개선, 개인 경작지 확대, 식량 생필품 배급제의 단계적 축소 폐지, 물가 임금의 대폭 인상, 환율 관세 조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개선조치가 가지는 의의는 국가가 총체적인 생산계획을 수립하고 가격을 결정하는 등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기본골격을 유지하고 있지만, 생산실적에 따라 임금을 차등 지급하는 등 시장지향적 개혁의 요소가 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또한, 2002년 9월 신의주 특별행정구를 지정 발표하고, ‘신의주특별행정구기본법’을 제정하였는데 동법에는 입법·사법·행정권 부여, 행정구 명칭의 대외사업 및 여권발급 가능, 행정구의 토지개발 이용 관리권 부여, 성별·언어·종교 등에 따른 차별 금지, 외국인의 입법의원 참가, 구장(區章)·구기(區旗) 사용 허용 등 행정구가 갖는 각종 권한과 기능이 열거되어 있다.

이어서 북한은 2002년 11월 남한 기업의 전용공단 조성 및 금강산 관광 활성화를 위해 개성·금강산을 특구로 지정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관리 개혁정책들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이며 종합적인 시장지향적 개혁정책과 대외관계 및 남북관계의 획기적인 개선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 이 주제를 다룰 때의 강조점 |

북한 경제의 기본구조인 사회주의 계획경제와 기본노선인 자립적 민족 경제 그리고 중공업 우선의 군산복합체의 개념을 설명하고, 그것이 지닌 근본적 문제점을 지적한다.

북한의 심각한 경제난은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파악하게 하고, 최근 통계 등을 통해 북한이 처한 경제실태와 현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북한이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추진하는 ‘경제관리 개선조치’ 및 신의주, 개성, 금강산의 특구 지정 등을 설명하고, 그 의의 및 가능성, 한계를 설명한다.

마. 북한의 문화

북한의 문화는 ‘사회주의적 내용과 민족적 형식’에 입각하고 있다.

북한은 분단 초기부터 1960년대 후반까지 마르크스-레닌주의 원칙에 따른 사회주의적 문화 건설에 충실하였다. 1967년이후 김일성 유일지배 체제가 본격화되면서 문화 예술활동의 방향이 급격히 달라졌다. 북한헌법 제41조에서 “국가는 사회주의적민족문화건설에서 제국주의의 문화적 침투와 복고주의적경향에 반대하며 민족문화유산을 보호하고 사회주의 현실에 맞게 계승발전시킨다”고 하고 있으며 제42조에서는 “국가는 모든 분야에서 낡은 사회의 생활양식을 없애고 새로운 사회주의적생활양식을 전면적으로 확립한다”고 하여 전통적 민족문화를 변질시켜 왔으며 문화적 폐쇄주의를 추구해 오고 있다.

특히 1974년 ‘당의 유일사상체계 확립 10대 원칙’이 주민행동강령으로 명문화되면서 ‘수령에 대한 충성심’과 ‘수령의 교시를 신조화’하는 것이 사회주의적 문화 건설의 가장 중요한 요건으로 자리잡았다.

이때부터 사회주의적 사실주의를 내세우는 문화적 전통이 퇴조하고, 유일지배체제를 정당화하는 ‘수령형상문학’이나 ‘항일혁명문학’이 강력하게 등장하여 이후 북한 문화를 이끌어 가는 하나의 축이 되었다.

한편, 1980년대 중반 김정일이 ‘조선민족제일주의’를 내세우면서 북한 당국은 사회주의 문화 건설에서도 민족문화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기 시작하였다. 1988년에 추석을 휴일로 지정한데 이어 1989년부터 구정과 한식, 단오도 휴일로 인정하여 민족고유의 명절을 부활시켰다. 또한 1970년대에 허무주의와 복고주의를 표현하였다는 이유로 혹독한 비판의 대상이 되었던 개화기 근대문화사를 복원하고, 일제치하에서 온 국민이 함께 불렀던 흘러간 가요를 모아 ‘계몽기 가요’라는 책자를 펴내기도 하였다.

북한문화의 규범으로 제시된 종자론도 문화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1970년대의 사회주의 문화변형 과정에서 김정일은 문화 예술분야 전반에 걸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는 우선 ‘피바다’와 ‘꽃파는 처녀’ 등을 영화화했고, 1973년에는 ‘영화예술론’에서 향후 북한의 모든 문화예술인이 반드시 따라야 할 규범으로서 ‘종자론’을 제시하였다.

종자란 “소재와 주제, 사상을 유기적인 련관 속에서 하나로 통일시키는 작품의 기초이며 핵”을 말하는데, “종자의 선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수령님의 교시와 그 구현인 당 정책의 요구에 맞추는 것”이라고 하고 있다.

북한 당국은 김정일의 역할을 강조하기 위하여 1972년 이후 문학예술 분야에 대한 김정일의 지시를 종합하여 ‘주체의 문예이론’이라는 명칭 아래 이른바 ‘말씀 시리즈’를 발간하여 문화예술 분야의 종합적인 지침으로 삼고 있다.

1970년대 3대혁명 소조운동과 3대혁명 붉은기 쟁취운동은 주민의 문화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1970년대 ‘3대혁명’과 그 소조활동은 북한 사회주의 문화건설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3대혁명이란 사상, 기술, 문화혁명으로서 ‘사회주의 건설의 총로선’을 의미한다. 그 이후 조선노동당은 중앙당에 3대혁명을 조직적으로 지휘하는 부서를 두고 전국적인 3대혁명 소조운동과 3대혁명 붉은기 쟁취운동을 추진하였다.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수행방침에 따라 예술창작에서도 속도전 원칙을 내세워 “창작사업을 최대한 빨리 밀고 나아가면서 작품의 사상 예술적 질을 가장 높은 수준에서 보장하는 것”에 힘을 쏟았다.

특히 1975년 이후 조선노동당의 결정에 따라 북한주민 누구나 참가해야 하는 대중운동으로 급격하게 떠오른 ‘3대혁명 붉은기 쟁취운동’은 북한주민들의 문화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 이는 북한의 당·국가·군에 속한 모든 기관과 공장이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했기 때문이다.

3대혁명 붉은기를 쟁취하려면 사상혁명 부분에서는 김일성·김정일의 노작 내용을 암기해야 하며, 기술혁명 부분에서는 3년 동안 국가계획을 100% 달성하고 기술발명 실적도 올려야 한다. 문화혁명 부분에서는 조직성원들이 한 가지 이상의 악기를 다루며 무대에 출연하여 1시간 이상 공연이 가능해야 하고, 100미터 달리기와 높이뛰기 등 ‘인민체력검정기준’에 도달해야 한다.

외부사회와의 접촉과 교류는 북한문화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최근 북한이 사회주의권 이외의 외부세계와 접촉하기 시작하면서 셰익스피어를 비롯한 서양 문학작품을 다시 소개하는가 하면, 외국의 동화책도 번역하여 출판하고 있다. 그리고 1990년대에는 영화와 가요 등 대중문화 분야에서 ‘도시처녀 시집와요’, ‘청춘이여!’, ‘휘파람’, ‘대동강에 만난 사람들’, ‘가족롱구선수단’ 등 사상성 혁명성의 요소가 다소 약화된 반면 일상적인 정서를 반영하는 작품들도 등장하였다.

그러나 북한 당국은 개방에 따른 외부 문화, 특히 자본주의문화의 유입에 대해서는 ‘황색바람’을 차단한다는 명목으로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혁 개방이 진전됨에 따른 외부 문화와의 교류 기회 증가는 주민들의 의식과 북한 문화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 이 주제를 다룰 때의 강조점 |

사회주의 체제를 바탕으로 한 북한 문화의 정치적 역할을 설명하고, 특히 3대 혁명의 문화혁명 부분이 북한주민의 일상적 문화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이해하도록 이끌어 준다.

북한 문화의 변화 과정에 대한 설명을 통하여 북한의 문화도 변화하고 있음을 강조한다. 특히 북한의 민족문화는 1960년대 후반 이후 흑독한 시련기를 겪다가 1980년대 중반 무렵부터 다시 등장하게 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민족문화의 변질도 있었다는 점을 이해시킨다.

남북한의 민족문화에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음을 이해하고, 앞으로 우리의 민족문화를 함께 만들어 나갈 합리적 방안에 대해 생각하도록 지도한다.

바. 북한의 교육

북한 교육의 목표는 공산주의적 인간관을 갖춘 혁명투사의 육성이다.

북한 헌법 제43조는 북한 교육의 목표를 ‘사회주의교육학의 원리를 구현하여 후대들을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투쟁하는 견결한 혁명가로, 지덕체를 갖춘 공산주의적 새 인간으로 키우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에 의하면 사회주의 교육은 “공산주의적 인간을 양성하는 사상 문화교양의 무기”이며, 교원은 “후대들을 혁명의 계승자, 공산주의자로 키우는 직업 혁명가”로 규정된다. 사회주의 교육은 “모든 학생들이 개인주의 리기주의를 없애고 집단주의 원칙에 따라 사회와 인민의 리익, 당과 혁명의 과업을 위하여 몸바쳐 투쟁하도록 교양”함으로써 공산주의적 인간관을 갖춘 혁명투사로 길러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혁명투사의 육성이라는 북한 교육의 목표는 학교 현장에 실제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학생들은 다른 교과목에 앞서 혁명역사 과목에서 좋은 성적을 올려야 하며, 영어를 배울 때에도 “원수를 알려면 그 나라 말을 알아야 한다”는 정신교육이 전제되고 있다. 또한 특수교육인 경우에도 외국어나 예체능 분야에서 특출한 재능을 나타내는 아동들을 집중적으로 훈련시켜 당과 수령을 위한 혁명투사로 육성하고 있다.

북한 교육의 기본지침은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이다.

북한은 1999년 교육법을 채택하여 교육정책의 방향을 명문화하였으나, 1977년 발표한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가 북한 교육의 기본지침을 이루고 있다. 이 지침은 사회주의 교육 전반에 관한 김일성의 연설과 교시를 체계화한 것으로 사회주의 교육의 원리, 내용, 방법, 제도, 교육기관의 임무와 역할 및 교육사업에 대한 지도와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북한은 공산주의적 인간양성을 위해 의무교육체계를 확립하여 시행하여 왔다.

북한은 건국 초기부터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공산주의적 인간으로 키우기 위한全民교육' 시행을 위하여 의무교육체계를 확립하는 것에 힘을 기울였다. 1949년 북한은 전반적 초등의무교육제도를 실시할 것을 결의하였다. 이후 1967년에는 9년제 기술의무교육을 전반적으로 시행하다가 1975년 9월 이후 유치원 1년과 소학교 4년, 중학교 6년을 포함하는 전반적 11년제 무상의무교육제도를 실시하기 시작하였다.

북한은 1997년부터 기존의 9월 1일에 시작하던 신학년 제도를 4월 1일로 변경하였으며, 2002년부터는 기존의 '인민학교'를 '소학교'로, '고등중학교'를 '중학교'로 각각 명칭을 변경하였다.

11년제 무상의무교육제도의 실시는 북한 당국이 주민들을 향해 체제에 대한 자부심을 갖도록 유도하는 요소 중 하나로 사용되었다. '무상교육제도'에서 돈이 없어도 누구나 배우고 공부할 수 있다는 점을 내세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11년제 의무교육 기간을 거치는 동안 완전 무상으로 공부하는 것은 아니다. 교과서, 학용품, 교복 등은 돈을 주고 구입해야 하고, 각 학교의 소년단과 청년동맹 단위로 '좋은 일 하기 운동'을 벌여 학생들이 고철 폐휴지 빈병 등을 모아 학교에 제출하는가 하면, 바쁜 농사철에는 농촌동원을 나가서 노동력을 제공해야 한다.

| 이 주제를 다룰 때의 강조점 |

북한의 교육이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라는 원칙에 따라 사상성이 투철하고 집단주의적 가치를 내면화한 혁명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제시한다.

1990년대 이후 외부와 교류가 많아지면서 북한의 청소년집단에서도 실용적 경향이 생겨나기 시작하였다는 점을 이해하도록 지도한다.

북한 교육제도의 장점과 단점을 비교한 뒤 그 속에서 자라나는 북한의 청소년과 우리 청소년들간의 이질적인 부분과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사. 북한 주민의 가치관과 대남인식

(1) 북한주민의 가치관

규범적 가치관이 정해져 있다.

북한주민의 가치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규범적 가치와 주민들의 실제 가치관을 구별해야 한다. 규범적 가치는 공식문헌들을 통해 파악될 수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지도자관과 집단주의이다.

첫째, 일인지배를 정당화하는 지도자관이다.

지도자관은 ‘혁명적 수령관’에 기초하고 있다. ‘혁명적 수령관’은 “수령의 지위와 역할에 대한 견해와 관점, 수령을 모시는 자세와 입장”으로 정의된다. 다시 말해 “혁명에서 절대적 지위를 차지하고 결정적 역할을 하는 수령을 충성과 효성으로 모셔야 한다”는 것이다. 수령에 대한 충성은 곧 당과 인민, 계급에 대한 충성의 최고 표현으로 간주된다.

둘째, 개인의 이익보다 집단의 이익을 더 존중하는 집단주의이다.

집단주의는 “개인의 이익보다 집단의 이익을 더 존중하고 집단을 위해 자기를 희생하는 정신”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집단주의 정신은 북한헌법 제63조의 ‘하나를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구호에 잘 나타나 있다. 북한은 집단주의 사고형성을 위해서 개인의 욕구본성을 사회주의 이전의 ‘낡은 사회의 유물’로 규정하고 개인주의 극복을 위해 부단한 사상교양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북한 당국은 모든 주민이 수령이 베푸는 은덕에 충성과 효성으로 보답해야 하며, 동료들 사이에서 혁명적 동지애와 의리를 지킬 것을 장려하는 등 인간 관계를 규정하는 정서적 규범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조선노동당과 외곽단체의 조직생활을 통해 집단주의 생활방식을 강력하게 권장하고 있다.

현실적 가치관은 규범적 가치관과 다르다

1990년대 최악의 경제위기와 사회 혼란을 겪으면서 북한 주민들의 규범적 가치는 많이 약화되었다.

첫째, 정치 불신과 무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최악의 경제위기는 주민 생존권에 대한 당국의 책임한계를 보여주었고 이는 정치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 정치적 불만에 대한 집단행동이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있는 상황에서 북한 주민들은 정치에 대한 무관심 현상을 보이고 있다. 최근 북한 청년들이 조선노동당 입당을 기피하고, 당 일꾼보다 대외상업, 행정 등 생활과 밀접히 연관된 부문에서 일하려는 실리적 경향을 보이며, 이러한 청년들을 최고의 신랑감으로 꼽는 북한여성들의 성향도 주민들의 정치 무관심과 관련되어 있다.

둘째, 일상생활에서는 자신과 가족의 생존을 최우선 가치로 추구한다.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장사를 해 돈만 많이 벌면 된다’는 물질주의가 팽배해지고 있다.

규범적 가치의 내면화 정도는 주민들의 사회정치적 출신성분과 당국에 대한 신뢰 정도에 따라 다르다. 중요한 것은 경제위기와 사회혼란을 겪으면서 겉으로는 규범적 가치에 순응하는 태도를 보이나 일상생활에서는 자신과 가족의 생존을 최우선 가치로 추구하는 생존규범이 태동되고 있다.

이와 같은 변화를 겪는다고 하더라도 북한주민의 공식규범과 관련된 가치관은 여전히 일인지배를 정당화하는 지도자관이나 집단주의 원칙을 강조하고 사회주의 체제에 대한 우월의식을 강조하는 조직생활의 특성 때문에 쉽게 무너져 내릴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상황에서도 북한체제가 쉽게 붕괴할 것으로 보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 북한주민은 누구나 조선노

동당 또는 그 외곽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철저한 조직생활을 강요받고 있고 감시와 사상교육을 통해 일탈행위를 봉쇄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2) 북한주민의 대남인식

표면적 대남인식

북한주민의 대남인식은 표면적 인식과 내면적 인식으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당국에 의해 주입된 표면적인 대남인식에는 민족적·계급적 시각이 강하게 반영되어 있다.

첫째, 한국은 '미국의 식민지' 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

“한국의 역대 정권들은 모두 미국의 ‘각본’에 따라 만들어졌고, 경제·군사·문화 등 모든 영역이 미국의 지배하에 있다”고 교양되고 있다. 주한 미군으로 대표되는 '미국의 식민지적 지배의식'은 주민들 속에 비교적 강하게 인식되어 있다.

둘째, 한국 정부는 극소수 '착취계급'의 이익을 옹호하는 '반동집단'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 계급주의적 관점에서 한국정부와 자본가 등을 이른바 '반동집단'으로 보고 혁명의 대상으로 간주한다. 최근에는 '반동집단'을 북한에 대한 호의적 태도여부에 따라 규정하고 있다.

내면적 대남인식

북한주민들은 남한에 대한 자기 생각을 여간해서는 말하려 하지 않는다. 표면적인 대남인식과 상반된 생각을 표현하는 것이 얼마나 자신에게 불리하고 위험한 일인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북화해협력정책이 지속되고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한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발전한 한국 사회의 현실이 북한주민들에게

많이 알려지게 되었다. 그 결과 ‘남한’에 대한 동경심이 증대되고 있다. 즉, 북한당국이 강조하는 공식적인 대남인식과 상반된 내면적 대남인식이 북한주민들에게 서서히 자리잡아가고 있다.

| 이 주제를 다룰 때의 강조점 |

북한주민의 가치관을 구성하는 특징적 요소로서 일인지배를 정당화하는 지도자관, 집단주의 원칙과 생활방식, 북한주민의 대남인식의 내용이 그들의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표현되는지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북한주민의 현실적 가치관과 비공식적 대남인식은 대내외적 여건에 따라 영향을 받으며 변화한다는 점을 규범적 가치관 및 표면적 대남인식과 비교하여 이해할 수 있게 한다.

아. 북한주민의 생활

(1) 북한주민의 가정생활

북한은 ‘혈연 가정’ 과 ‘사회주의 대가정’ 이라는 두가지 개념이 공존한다.

북한은 가정의 개념을 두 가지로 구분하여, 혈연 관계를 기초로 구성되는 가정과 ‘수령-당-인민대중’ 의 위계적 통일체로 이루어지는 ‘사회주의 대가정’ 으로 나누고 있다. 사회주의 대가정이란 북한사회 전체를 하나의 가정으로 보고, 수령-당-인민의 관계를 아버지-어머니-자녀의 관계와 같다고 보는 개념이다.

북한은 사회주의 대가정론을 통하여 ‘국가’ 라는 2차집단을 ‘가정’ 이라는 1차집단에 접목함으로써 ‘혁명의 최고 령도자인 수령’ 이 각 가정에서 육체적 생명을 준 부모보다 더 중요한 구심점의 역할을 한다는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 각 가정의 가장 좋은 벽면에 김일성-김정일의 사진을 정성껏 모시는 생활방식을 통해 수령을 ‘진정한 아버지’ 로 인식시키고자 한다.

북한주민의 가정생활은 우리의 전통적인 가정생활과 별로 다름이 없다.

정치적인 측면을 제외하면 북한주민의 가정생활은 우리의 전통적인 가정생활과 비슷한 것으로 나타난다. 부모는 자녀를 아끼고 사랑하며, 자녀는 부모를 믿고 의지하는 것이 보편적인 현상이다. 일반적으로 부모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자녀가 공부를 잘하고 좋은 학교를 나와서 다른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사회 일꾼으로 자라나고, 훌륭한 배우자를 만나서 가정을 꾸리는 것이다.

부모가 자녀의 대학 진학을 위해서, 좋은 직장에 배치받기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관계자를 찾아다니는 사례를 흔히 볼 수 있다. 또한 장래가 촉망되는 처녀나 총각을 자녀의 배우자로 고르기 위해 부모가 적극적으로

나서 주변에 널리 부탁하는 모습도 쉽게 눈에 띈다.

가정 내에서 아버지와 남편의 위치는 절대적이다. 자녀들은 아버지를 어려워하며, 아버지와 의견이 다르거나 아버지께 간청할 일이 있으면 어머니를 통해 간접적으로 부탁하는 경우가 많다. 아내는 남편을 '세대주'라 부르며 남편 잘 모시는 일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

북한에서도 남아선호 사상이 뚜렷이 남아 있고, 가정에서 일반적으로 딸보다 아들이 훨씬 우대를 받는다. 부모들은 딸보다 아들이 태어날 때 더 좋아하며, 딸을 많이 낳고 아들을 낳지 못한 여자는 남편에게 늘 미안한 마음을 갖는다. 또한 남녀평등정책이 있다고 하지만 가정에서 딸이라는 이유로 오빠나 남동생에 비해 차별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

1990년대 이후 경제난으로 인해 가족해체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경제난이 심각해지면서 북한주민의 가정생활 역시 중대한 변화의 고비를 맞고 있다. 한편으로는 어려운 사회상황 속에서 가족간의 유대 관계가 전보다 심리적 정서적으로 강화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하지만, 식량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생존을 위해 각자 살길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가족이 해체되는 사례도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 이 주제를 다룰 때의 강조점 |

북한사회에서 가정이라고 할 때, 혈연을 기초로 한 가정과 사회주의 대가정의 두 가지 개념으로 구성된다는 점을 제시한다.

북한주민의 가정생활도 우리의 전통가정과 크게 다를 바가 없으며, 가족구성원 사이에 인간적인 정을 나누고 서로 아끼며 사랑하는 관계를 중요하게 여긴다는 점을 이해하도록 이끌어 준다.

(2) 북한주민의 사회생활

북한주민의 사회생활에서는 누구나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조직생활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사회생활’이라고 떠올릴 만한 것이 북한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한국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취미, 친목, 종교 등의 단체에 가입하여 여가 시간을 활용하거나, 아예 가입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이러한 자유가 없기 때문에 북한주민은 연령과 계층에 따라 조선노동당을 비롯한 다양한 조직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 활동해야 한다. 그 활동은 매우 엄격하게 통제되고, 그 내용도 대체로 정치적 성격을 띠고 있다.

만7세 이후에는 조선소년단에 입단하고 만14세에서 30세까지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청년동맹)에 가입하여 활동한다.

북한주민의 조직생활은 사실상 유치원 시절부터 시작하지만 본격적으로 조직생활을 하는 것은 만 7세 이후 조선소년단(소년단)에 입단할 때부터 시작된다. 그리고 만 14세가 되면 청년동맹에 가입한다.

청년동맹의 맹원은 중학교 4학년에 해당하는 만 14세 이후 만 30세까지의 북한주민으로 구성되어 있다. 중학교를 졸업한 뒤에는 각자의 직장에 소속한 청년동맹 조직으로 옮겨가게 되며, 북한사회에서는 청년동맹을 조선노동당의 후비대로 인정하여 중시하고 있다.

북한의 성인은 조선노동당 당원으로 입당하거나 외곽단체에 가입해야 한다.

만 18세 이후에는 조선노동당 당원으로 입당하여 당조직으로 옮겨가기도 하고, 여성의 경우 청년동맹 맹원으로 활동하다가 결혼한 이후 직장

다니지 않고 조선민주여성동맹(여맹)에 가입하는 사람도 생긴다. 만 30세 이후에도 입당을 하지 못한 사람들은 각자의 직장에 따라 조선직업총동맹(직총)이나 조선농업근로자동맹(농근맹)으로 옮겨가야 한다.

조직생활 중에서 가장 엄격한 것은 조선노동당의 최말단 기층조직으로서 당의 조직생활과 정책수행의 최소단위인 당 세포의 조직생활이다. 약 300만 명 정도로 추정되는 당원들은 직장별로 5~30명 단위로 당 세포를 구성하고 세포비서의 지도 아래 철저한 조직생활을 한다. 그러나, 직총과 농근맹, 여맹의 조직생활은 당 세포의 조직생활만큼 강하지는 않다.

당조직의 지도에 따라 사상학습을 받고 조직생활을 한다.

북한주민들은 자기가 속한 단체별로 정치학습, 생활총화, 기술학습 등 설새없이 각종 모임에 참가해야 한다. 특히 조선노동당이나 외곽단체의 소속원이 생활총화에 빠지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심지어 몸이 아파서 집에서 쉬고 있거나 정년퇴직에 해당하는 연로보장을 받아 직장에 나가지 않는 사람도 동네 인민반을 통해서 당의 지도에 따라 조직생활을 해야 한다.

심각한 경제난으로 인해 조직통제가 약화되어 가고 있다.

경제난으로 인해 북한주민의 조직생활도 많이 느슨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많은 주민들이 장사나 소토지 운영 등으로 생계를 꾸려가고 있으며, 노동자들의 직장이탈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직장에서 공공물자 횡령과 관리들의 부정부패도 널리 확산되고 있다.

또한 식량을 구하기 위한 주민들의 이동이 크게 증가하였다. 북한 당국이 이러한 주민의 이동을 강력하게 통제하지 못하게 되면서 인구 유동성이 증가하고, 결과적으로 청년동맹 등 조직생활도 전반적으로 느슨해지고 있는 것이다.

| 이 주제를 다룰 때의 강조점 |

우리와 북한주민의 사회생활 차이와 공통성에 대해서 논의하고, 북한주민들의 조직생활은 어린 시절부터 시작하여 평생 동안 이어지는 과정이라는 점을 설명한다.

북한주민들의 사회생활을 장악하고 있는 조선노동당과 외곽단체의 조직생활을 설명하고, 그 조직생활이 이완되고 있는 현상과 이유를 밝혀 준다.

경제난과 식량난으로 인해 북한주민들의 사회생활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 설명하고, 향후 이들의 미래가 어떻게 변화하게 될지를 전망해보도록 한다.

3. 북한의 변화

가. 내부변화의 양상

북한은 1990년대 이후부터 체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일련의 개혁조치를 시도하고 있다.

북한은 개혁 개방과 같은 변화를 체제붕괴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1990년대 초 사회주의권 해체 직후에는 변화에 대해서 상당히 소극적 태도를 취해 왔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의 심각한 경제난과 그에 따른 체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생존 전략적 차원에서 점차 변화의 길을 모색해 오고 있다.

북한은 2001년 신년공동사설을 통해 ‘모든 부분에서 실리를 철저히 보장할 것’을 역설하고 이른바 ‘신사고’ 캠페인을 통해 의식 전환, 기술개혁, 산업구조 개편 등을 추진하는 한편 대외경제 확대정책의 일환으로 가공무역법, 갑문법, 저작권법을 채택하였다.

2002년에는 보다 획기적인 경제정책을 전개함으로써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즉 2002년 7월 ‘경제관리 개선조치’ 시행을 통해 기업의 경영자율권 확대, 식량 생필품 배급제의 단계적 축소 폐지 등 시장경제적 요소를 실험적으로 도입하고 외부자본 유입을 추진하고 있다. 또 신의주·개성·금강산 지역을 특구로 지정하기도 하였다.

2003년에는 핵문제 등으로 인해 경제분야에 대한 특별한 조치는 발표되지 않았지만,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경제조치들을 ‘개혁’이라고 공식 표현하는 등 변화를 보이고 있다. 또한 남북경협추진위원회를 통해 각종 남북경제협력사업 추진에 합의하였다.

한편 사회 분야에서는 국내외 방북자 증가, 접경지역 무역 활성화, 남한

과의 인적 물적 왕래가 잦아짐에 따라 북한주민들 사이에서 물질에 대한 욕구, 이윤추구 등 자본주의 시장경제 인식과 함께 대남인식에 있어서도 두드러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북한의 변화 양상 이면에는 사회주의 이념고수, 선군정치, 주민사상통제 강화 등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북한은 정치 분야에서 사회주의 이념과 체제를 유지하려는 강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우리식 사회주의’를 고수하는 가운데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대한 주민들의 충성심을 제고함으로써 내부 결속력을 유지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그것이다. 통치방식에 있어서도 ‘선군정치’를 지속적으로 강조하여 군을 정치의 중심축에 놓고, 국방공업의 필요성을 더욱 강조하고 있어 과거와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한 북한 당국은 자본주의 사상유입을 경계하고 주민통제 및 체제단속을 강화함으로써 주민들의 의식변화의 움직임에 민감하게 대처하고 있다. 즉, 식량난 경제난으로 다소 이완되었던 주민통제체제를 경제난의 호전 징후와 함께 다시 강화하고 있다.

이와 같이 북한은 체제생존을 위하여 변화를 시도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일련의 변화가 체제붕괴로 이어지지 않도록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 이 주제를 다룰 때의 강조점 |

최근 북한사회 내부의 분야별 구체적 변화 양상을 현실감 있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며, 북한 당국이 내부의 여러 변화에 어떠한 태도와 조치를 취하는지 알게 한다. 북한 내부의 경제 사회적 변화가 북한체제의 변화 방향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알게 한다.

북한 내부의 변화가 남북관계 개선에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이해하게 한다.

나. 대남정책의 변화

북한의 대남정책은 대내외 정세변화에 따라 달라져 왔다.

1980년대까지 대남정책은 '남조선 혁명론'에 바탕을 두고 전개되었다.

냉전시기였던 1980년대에 북한의 대남정책은 혁명을 통해 남한에서 공산정권을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남조선혁명론'에 바탕을 두고 전개되었다. 그러나, 북한의 대남정책은 1990년대 이후 대내외적 환경변화로 체제위기가 심화되면서 전술적 변화를 꾀하고 있다.

1990년대 이후 생존과 체제유지를 위해 대남정책에 변화가 있었다.

북한은 소련을 비롯한 동구 등 사회주의권의 몰락과 북한경제의 침체, 그리고 남북한 국력격차가 심화되자 '남조선 혁명을 통한 공산화 통일'이라는 궁극적인 목표에 앞서 당면한 생존전략 차원에서 체제유지에 주력하는 전술적 변화를 모색하게 되었다. 즉, '남한에 대한 사회주의 혁명'을 추구하기에 앞서 현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북한의 당면과제가 된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북한은 1991년 신년사에서 '느슨한 연방제'를 제안하였으며, 같은 해 9월에는 '하나의 조선' 논리를 사실상 포기하고 UN 동시가입을 수용하였으며, 12월에는 '공존논리'를 바탕으로 한 '남북기본합의서'를 채택하는 등 대남 강경노선에서 후퇴한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1990년대 중반 이후 경제난이 심각해지게 되자 남한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경제적 지원과 협력을 받아들이게 되었으며 대남관계에서도 유연한 자세를 보였다.

특히 2000년 6월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대남비방을 자제하고 민간교류를 적극 추진함으로써 대남인식과 정책이 실용주의적 방향으로 바뀌어

진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예컨대, 2003년 8월부터는 과거 33년동안 이어져온 북한의 대남흑색방송인 ‘구국의 소리 방송’을 중단하는 등 북한의 대남정책은 ‘혁명에 의한 통일 전략’을 견지하는 가운데 1990년대 이후는 생존과 체제유지 차원에서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북한은 통일방안으로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북한의 연방제 통일방안은 남한의 연공정부(‘민주정부’로 표현) 수립과 국가보안법 폐지, 주한 미군 철수 등을 통일의 선결조건으로 하고 있으며, 통일의 중간과정 없이 바로 정치 외교 군사권을 보유하는 연방정부를 수립하자는 것이었다.

이러한 북한의 연방제는 하나의 중앙정부와 서로 이념과 체제가 다른 남북한 두 개의 지역정부를 구성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념과 체제가 다른 지역정부간에는 연방이 성립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도 그러한 사례가 없다. 따라서 남과 북이 서로 상이한 체제하에서 연방국가의 실현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대내외적 상황이 악화되는 1990년대에 들어와 북한은 ‘느슨한 연방제’로 변화를 꾀하였다.

1990년대에 들어와 사회주의 국가들의 체제전환 과정이 가속화되고 북한의 경제난이 심화되는 등 대내외적 상황이 어려워지자 북한은 수세적인 입장에서 연방제를 점차적으로 완성한다는 논리를 내세우며 지역정부의 권한이 강화된 ‘느슨한 연방제’를 제안하고 있다.

남북은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을 통해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 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고 합의한 바 있다.

북한이 제시한 ‘낮은 단계의 연방제’는 ‘느슨한 연방제’의 내용과 유사한 것으로서 남북이 현재의 2체제 2정부를 유지하면서 정치 군사 외교권 등을 그대로 보유하는 형태로 연방을 결성하자는 것이다.

북한은 공식적으로는 ‘전한반도의 공산화’라는 대남 혁명노선을 견지하고 있다.

그러나 두 차례에 걸친 서해교전, 미사일 및 핵 등 대량살상무기 개발 의혹 등을 볼 때, 북한이 대남 무력혁명노선을 포기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우리는 북한을 통일의 상대방으로 인정하고 지속적인 교류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북한의 도발에 대한 경각심을 늦추어서는 안 될 것이다.

| 이 주제를 다룰 때의 강조점 |

북한의 대남정책이 변화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살펴보고, 남북관계에 있어 어떠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지 설명한다.

1990년대 이후 북한의 대남정책이 생존과 체제유지 차원에서 변화를 시도하고 있지만 한반도 공산화라는 목표를 포기한 것은 아니므로 이에 대한 경각심을 잃지 않도록 지도한다.

북한의 통일방안은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이지만, 최근 북한이 기존의 연방제안을 다소 수정하여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제시하고, 6.15 남북공동선언 제2항에서도 합의 규정한 의미에 대하여 생각해 보도록 지도한다.

다. 대외정책의 변화

북한은 체제의 유지 발전과 한반도 공산화통일에 필요한 국제적 여건조성과 국제혁명역량의 강화를 목표로 외교활동을 전개해 왔다. 냉전질서 하에서 북한은 소련, 동유럽 등 사회주의권과 제3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외교에 치중하였으나, 사회주의권의 몰락과 냉전 체제가 붕괴되면서 미국, 일본, 유럽 등과의 관계 개선을 모색하고 있다.

미국·일본과의 관계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북한은 미국의 클린턴 정부 당시인 2000년 10월 조명록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을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특사로 미국에 파견하여 북·미 공동성명을 이끌어 내는 등 대미 관계 개선을 적극 추진하였다. 그러나 부시 정부 이후 북미관계는 악화되었고, 급기야 2002년 10월 미국의 대북특사 방북 이후 불거진 핵문제로 인해 북미관계는 또 다시 냉각국면에 처하게 되었다.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2002년 9월 17일 고이즈미 일본 총리가 평양을 방문하여 북·일 정상회담을 실시하고 ‘북일평양선언’을 발표하였다. 그 동안 북일간에 걸림돌이 되었던 일본의 과거사 청산문제, 일본인 납치 문제 등에 있어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도 하였다. 그러나 북한의 일본인 납치 인정 및 북한 핵문제 등으로 인하여 일본의 대북 여론이 악화되면서 현재 북일관계는 교착상태에 있다.

전통적 우방인 중국과 러시아와 우호관계증진을 위해서 힘쓰고 있다.

북한은 중국과의 정상외교를 통해 전통적인 우호 관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미국의 압박정책을 견제하는 한편, 중국으로부터 다방면적 지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러시아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양국 정상의 상호방문을 통해

북·러 관계의 긴밀화를 대외적으로 과시하면서 미국을 견제하고 북·러 간 극동지역 경제협력 등 실질 협력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

유럽연합(EU)국가들과의 수교 등 외교의 다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북한은 2000년대에 들어서서 유럽연합(EU) 국가들과 수교하고 대표단을 초청하는 등 유럽국가들과 관계 개선에 적극 나서고 있으며, 동남아 국가와의 수교 관계도 강화하는 등 다양한 외교정책을 전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은 2000년 1월 이탈리아와의 수교를 시작으로 호주, 필리핀, 영국, 독일 등 18개 국가들과 새롭게 수교하였으며 대외관계 개선 또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

이와 같이 김정일 체제의 외교정책은 과거 김일성 체제가 사회주의 진영을 중심으로 하는 외교와 중·소간의 경쟁을 유발하는 외교를 전개한 것과 달리 전 세계를 상대로 하는 전방위 외교를 추진하고 있다

요컨대 북한의 대외정책은 체제생존 및 경제난 극복을 위해 국제적 고립을 탈피하고 대외지원 획득을 도모하는 등 실리외교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 이 주제를 다룰 때의 강조점 |

북한의 대외정책이 체제생존 및 경제난 극복을 위해 국제적 고립을 탈피하고 대외지원 획득을 통해 경제활성화를 도모하는 등 실리를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설명한다.

북한은 1990년대 후반부터 전방위적인 대외 관계 개선을 시도했지만, 핵문제와 일본인 납치문제 등으로 인해 대미 대일 외교가 답보상태에 있으며, 이는 북한의 대서방외교의 걸림돌이 된다는 점을 이해시킨다.

라. 북한변화의 의미

북한 변화는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고 체제유지를 위한 일련의 조치들이다.

북한은 1990년대 이후 경제관련 법률을 정비하고 ‘나진·선봉 경제특구’를 지정하였다. 특히 2002년 들어 ‘경제관리 개선조치’를 시행하고 신의주, 개성, 금강산 등을 특구로 지정하는 등 제한적이지만 점진적 변화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한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서방국가들과 관계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남북 정상회담 개최, 경의선 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등 과거에 비해 남북관계 개선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북한 변화는 북한 지도부의 자발적 의지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환경적 요인에 의해서 주로 영향을 받고 있다.

북한의 변화는 북한 당국의 의지에 의한 능동적인 것보다 외부요인의 영향을 받는 수동적 변화라는 측면이 강하다. 소련, 동구 등 사회주의권의 붕괴와 경제난과 같은 대내외 환경이 북한으로 하여금 생존을 위해 변화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정치적으로는 여전히 군을 중요시하는 ‘선군정치’를 추진하면서 기존의 사회주의 체제의 틀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미사일 및 핵 개발 등으로 국제사회와 긴장 관계를 조성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북한은 체제 유지와 경제난 극복을 위하여 결국은 개혁·개방의 방향으로 나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우리는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되, 우리와 적대 관계를 해소하고 남북이 함께 번영하는 경제공동체를 형성하여, 한반도에 평화정착을 이룩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야 한다.

| 이 주제를 다룰 때의 강조점 |

북한의 경제적 조치 등 일련의 변화가 자발적이 아니라 환경적 요인에 의한 것이고 체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지만 우리는 북한의 이러한 변화를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는 계기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함을 인식시킨다.

4. 통일환경의 변화

가. 국제질서의 변화

오늘날 국제정세의 변화는 전세계적 수준에서 다양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냉전시대에는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하는 양극 구조였던 국제사회가 오늘날에는 미국을 중심으로 하여 유럽연합, 중국, 일본 등이 전반적인 국제질서의 흐름을 주도하면서 정치·경제·과학기술 등 제반 분야에서 사안별로 협력하고 견제하는 체제로 변화하고 있다.

또한, 이데올로기 중심의 군사안보적 냉전체제가 종식되면서 경제력과 과학기술력을 바탕으로 자국의 실리를 중요시하는 경제 전쟁시대가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새로운 흐름 속에서 각 나라들은 최고수준의 재화와 서비스를 창출하려고 경쟁하는 한편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상호협력 관계를 강화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한편, 강대국간 분쟁의 가능성은 줄어든 반면 냉전시대에는 잠재되어 있던 종교·인종·민족간의 갈등이 표출되고, 테러·게릴라전·정보전과 같은 비전통적 형태의 위협이 증대되고 있다.

탈냉전의 새로운 국제질서는 통일환경 변화의 중대한 요인이 되고 있다.

국가간 상호작용의 활성화 흐름은 동북아지역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 냉전시대에 적대적 경쟁 관계에 있던 국가들이 화해와 협력적 경쟁 관계로 전환하면서, 우리나라는 분단이후 오랜 적대 관계에 있던 중국, 소련 등 구공산권국가와의 수교는 물론 경제적·정치적·군사적 교류를 증대시켜 나가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북한과 미국·일본 사이에도 영향을 주어 새로운 관계 수립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가고 있다.

한편, 새로운 국제질서는 냉전시대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시련과 도전을 북한에게 안겨 주고 있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가 세계 시장경제체제에 편입되면서 그 동안 냉전체제 속에서 사회주의시장에 의존하였던 북한은 경제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 이처럼 국제질서의 변화는 남북관계에 중요한 변화를 초래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주변 4국은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자국이익을 위하여 사안에 따라 협력과 경쟁 관계를 병행하고 있다.

한반도 주변 4국은 한반도 문제에 대한 영향력 확대 및 자국의 실리도모를 위해 경쟁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반도 문제가 국제적 문제로 더욱 부각되는 경향이 나타난다. 미국과 중국은 상호 협력하는 한편 동북아지역의 미래와 관련하여서는 서로 견제하고 있다. 또한 미·일간의 안보협력에 대하여 중·러는 전략적 유대관계 강화를 통해 대응하고 있다. 이렇게 주변 4국은 자국의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상호 협력하거나 경쟁하고 있다. 특히, 주변 4국은 한반도에서의 급격한 상황변화가 발생할 경우 동북아 국제질서가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그러므로 주변국가들에 대하여 남북관계의 점진적 개선과 북한의 안정적인 변화가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점을 이해시켜 나감으로써 주변국들이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에 협력,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이 주제를 다룰 때의 강조점 |

국제질서 변화가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시켜, 변화하는 국제 환경 속에서 한반도 문제를 생각하는 사고를 키우는데 주력한다.

한반도 통일환경을 국제질서의 변화와 주변강대국의 이해관계라는 큰 틀 안에서 볼 수 있도록 지도한다.

나. 남북한 국력격차의 심화

남북한의 국력격차를 경제적 측면, 군사 외교적 측면, 정치체제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경제적으로 1960년대에는 북한이 공업화 수준과 그에 따른 경제력에서 남한을 앞질러 있었다. 그러나 남한에서 산업화 경제발전전략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한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남한의 경제력이 북한을 추월하기 시작하였다. 1980년대 말 탈냉전시대에 들어서서도 남한이 지속적으로 고도 성장을 한 반면 북한은 경기 침체를 겪었기 때문에 그 격차는 더욱 심화되었다. 2002년도 국민총소득(GNI)을 기준으로 할 때, 남한의 경제규모는 북한의 28배에 이르고 있다.

군사력에서는 북한이 여전히 양적인 우위에 있는 것으로 평가되지만 주한미군을 포함한 연합전력은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기에 충분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 현재 우리의 대북 억제력은 지속적으로 안보태세를 강화해 온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외교 면에서도 남한은 냉전시대 북한의 동맹국이었던 러시아(구소련), 중국과 수교를 이룩한 반면에 북한은 우리의 우방인 미국, 일본과 아직 수교도 맺지 못하고 있다.

정치적인 측면에서 북한은 폐쇄적 독재체제를 지속하고 있는 반면, 남한은 1992년 이후 빠른 속도로 민주화됨으로써 정치발전을 이룩하였다. 남한에서의 정치발전은 민주적 과정을 통하여 국민의 다양한 견해를 수렴하고 국민적 합의를 도출함으로써, 정부가 취할 수 있는 통일정책 추진의 폭과 탄력성을 강화시켜 줄 수 있어 남북관계를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바탕이 되고 있다.

이러한 남북한 국력 격차의 심화는 통일논의 환경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았으며, 사실상 북한의 '민주기지론'에 입각한 남한 혁명론을 무의미하게 만들었다고 할 수 있다.

| 이 주제를 다룰 때의 강조점 |

남북한의 체제역량 격차를 구체적인 수치를 들어서 설명하고, 그 이유를 파악하게 함으로써 자신감을 심어 준다.

북한체제의 위기와 남북한 총체적인 국가역량의 격차가 기존의 통일논의 환경을 어떻게 바꾸어 놓았는지를 이해시킨다.

다. 통일환경 변화의 의미

변화된 통일 환경은 평화통일을 이룩할 수 있는 기회요인이다

통일환경의 변화는 우리에게 커다란 기회를 제공해 주고 있다. 사회주의권의 몰락 이후 진행되고 있는 국가간 상호작용의 활성화는 북한으로 하여금 전통적인 군사동맹국과의 관계 재조정을 불가피하게 만들었다. 즉, 북한의 체제위기와 남북한간의 심화된 국가역량격차는 남북 평화공존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북한은 사회주의권의 몰락과 부존자원 고갈이라는 악조건속에서 체제유지를 위해서라도 원하던 원하지 않은 시장경제 요소를 도입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실제로 북한은 경제 분야에서 상품 가격 및 임금의 현실화, 경제특구의 신설 확대 등 정책적 변화를 보이고 있다. 또한 전통적 우방인 중국 및 러시아와의 우호관계 강화는 물론 미국·일본 등과의 관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개방 및 대외관계 개선노력은 평화통일을 이룩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변화된 통일환경은 우리가 극복해야 할 과제를 제시해 준다.

우리는 북한의 이러한 변화 노력을 활용하여 한반도의 냉전구조해체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며, 주변국간의 관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한반도 평화정착을 실현해야 한다. 또한 체제위기에 몰린 북한이 충동적인 군사 행동을 하지 않도록 평화와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북한핵 문제는 남북한 및 주변 4국간의 관계를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민감한 문제중의 하나로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도 해결되어야 할 중요한 과제이다.

결국 변화된 통일환경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민족공동체의 발전을

저해하는 남북간의 적대적 대결상태를 극복하여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주변4국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 이 주제를 다룰 때의 강조점 |

변화된 통일환경이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는 기회와 도전 요인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도록 지도한다.

변화된 통일환경이 주는 기회를 활용하기 위해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나 실천사항들을 제시한다.

분단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그 바탕 위에서 평화통일로 나아가는 것이 변화된 통일환경에 지혜롭게 대응하는 길임을 이해시킨다.

5. 남북관계 개선노력과 국가안보

가. 남북관계 개선 노력

(1) 역대정부의 노력

1970년대 초 남북대화가 시작된 이래 정부는 점진적·단계적으로 평화 통일을 이루어 나간다는 입장에서 남북관계 개선 노력을 지속해오고 있다. 대북정책의 목적은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통해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평화적 통일의 기반을 조성하는 데 있다.

분단 이후 정부는 북한의 대남도발을 억제하는 한편,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다.

1971년 8월 우리측의 제의에 따라 분단 26년만에 남북적십자회담이 개최됨으로써 인도적 문제에서부터 남북대화가 시작되었다. 남북 고위 당국자간에도 비공개 접촉과 방문을 통해 1972년 7월 4일 분단 이후 최초의 합의문서인 ‘7 4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되었다. 이 성명에서 남북한은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이라는 통일 3원칙에 합의하였다.

1973년 6월 23일 제4공화국 정부는 ‘평화통일외교정책에 관한 특별선언’을 발표하여 “통일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북한과 함께 유엔에 가입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천명하였다. 이후 정부는 1974년 8월 15일 ‘평화통일 3대 기본원칙’ 천명, 1979년 1월 19일 ‘남북당국간 무조건 대화’ 제안 등을 통해 한반도 긴장완화와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한 의지를 표명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1982년 1월 22일 제5공화국 정부는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이라는 통일방안을 발표하고, 같은 해 2월 1일에는 서울·평양간 도로 연결 개통, 이

산가족 편지교류 및 상봉, 설악산 이북과 금강산 이남 지역의 자유관광 공동지역 개방 등을 포함한 20개항의 구체적 시범사업 실천을 제안하였다.

특히 1984년 9월 북한의 대남 수재물자 제공 제의를 우리측이 받아들임으로써 같은 해 11월 남북경제회담을 시작으로 적십자회담, 국회회담, 체육회담 등 일련의 회담이 열리고, 1985년 9월에는 남북이산가족 고향방문 및 예술공연단 교환방문이 성사되었다.

이어 1988년 2월에 출범한 제6공화국 정부는 사회주의 체제의 변화라는 국제환경 속에서 보다 전향적인 통일정책을 모색하였는데, 1988년 7월 '7·7선언'을 발표하여 적극적인 남북대화 추진 의사를 천명하였다.

1989년 9월에는 '남북연합'이라는 중간단계를 설정한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발표하였다. 이 방안은 단기간 내에 대치하고 있는 남북간의 통일 달성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인식하에 과도적인 통일체제로써 '남북연합'을 상정하고 통일의 원칙으로서 자주, 평화, 민주의 3원칙을 제시한 것이다.

1980년대 후반 소련, 동구 등 사회주의 진영의 붕괴를 계기로 탈냉전이 가속화되는 국제환경에 영향을 받아 남북한 당국은 적극적인 대화를 모색하였다. 그 결과 1990년 9월 분단 역사상 최초로 남북한의 총리를 수석대표로 하는 남북고위급회담이 열렸으며, 1992년 2월에 역사적인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남북기본합의서)와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을 발표시키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1992년 말부터 북한의 핵무기 개발 의혹이 증폭되고, 북한이 남한의 팀스피리트 훈련을 구실로 모든 남북 당국간 대화를 재개할 의사가 없음을 선언함으로써 남북관계는 다시금 교착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1993년 2월에 출범한 문민 정부는 남북 정상회담 추진 의지를 천명하는 등 적극적 대화를 모색하였으며, 이전 정부의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보다 발전시킨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발표하였다. 하지만 1993년 3월 북한의 ‘핵비확산조약(NPT) 탈퇴 선언’으로 긴장이 고조되었고, 남북관계도 위기국면으로 치닫게 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1994년 7월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키로 하였으나 김일성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실현되지 못했다.

1998년 출범한 국민의 정부는 현실적으로 통일보다는 남북관계 개선이 우선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대북포용정책’, ‘햇볕정책’으로 불리는 ‘대북화해협력정책’을 추진하였다.

대북화해협력정책의 목표는 ‘평화와 화해협력을 통한 남북관계 개선’이며,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① 한반도 평화를 파괴하는 일체의 무력도발 불용 ② 일방적 흡수통일 불추구 ③ 남북간 화해협력의 적극 추진을 대북정책의 3원칙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① 안보와 화해협력의 병행추진 ② 평화공존과 평화교류의 우선 실현 ③ 화해협력으로 북한의 변화여건 조성 ④ 남북간 상호이익의 도모 ⑤ 남북 당사자 해결 원칙 하에 국제적 지지 확보 ⑥ 국민적 합의에 의한 대북정책 추진 등을 대북정책의 추진기조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2000년 6월에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하여 ‘6·15 남북공동선언’을 발표하게 되었다.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다양한 남북한 당국간의 대화가 재개되어 실질 문제를 협의하고 실천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남북장관급회담, 남북국방장관회담, 남북적십자회담,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등 분야별 남북대화를 개최하여 실천과제들을 합의하고 이행함으로써 남북관계 개선의 폭

을 점차 넓혀가게 되었다.

또한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개성공단 건설, 대구 유니버시아드대회 북측 선수단 참가 등 다방면에 걸쳐 남북간 교류협력이 크게 증대하였다.

(2) 남북정상회담 개최

2000년 6월 13일부터 15일까지 김대중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하여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두 정상은 남북간 대화와 협력만이 분단의 심화를 막고 공동의 번영을 가져오며 평화통일을 앞당기는 길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이러한 합의를 바탕으로 ‘6 15 남북공동선언’을 발표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한다.
- ②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한다.
- ③ 흩어진 가족, 친척방문단을 교환하며 비전향 장기수 문제 등 인도적 문제를 조속히 해결한다.
- ④ 경제협력을 통하여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 문화, 체육, 보건 등 제반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한다.
- ⑤ 합의사항을 조속히 실천에 옮기기 위하여 당국사이의 대화를 개최한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적절한 시기에 서울을 방문한다.

‘6 15 남북공동선언’은 남북한 정상이 직접 서명한 최초의 합의라는 점에서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중요한 지침이 되고 있다.

(3) 참여정부의 노력

2003년 2월 새로 출범한 참여 정부는 역대 정부의 대북정책 등을 계승 발전시켜 통일·외교·안보·정책 전반을 포괄하는 ‘평화번영 정책’을 제시하였다. 이것은 한반도의 평화와 남북의 공동번영을 추구함으로써 평화통일기반을 구축하고 동북아 경제중심을 이룩하려는 장기적인 국가 발전 구상이라고 할 수 있다.

평화번영 정책의 목표는 ① 한반도의 평화증진 ② 한반도 및 동북아의 공동번영 추구이며, 이를 추진하기 위한 원칙으로 ①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② 상호신뢰 우선과 호혜주의 ③ 남북 당사자 원칙에 기초한 국제협력 ④ 국민과 함께 하는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참여정부에서는 이러한 목표와 추진원칙에 따라 북한 핵문제 등 당면한 안보위기 해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남북경제공동체 형성 등 구체적인 과제들을 실천해 나가고 있다.

| 이 주제를 다룰 때의 강조점 |

남북간 적대와 갈등 구조 속에서도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온 역대정부의 대북정책과 참여정부의 평화번영정책을 이해시킨다.

현재 남북간에 진행되고 있는 각종 회담의 내용과 의미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지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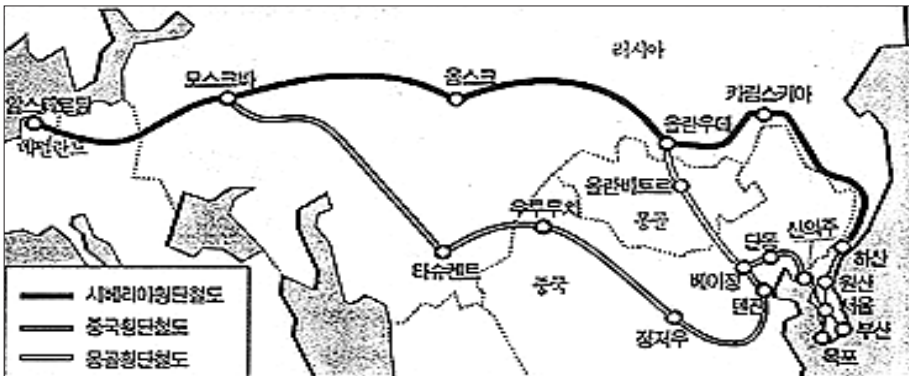
나. 남북교류협력의 진전

남북간의 교류협력은 분단이후 지속되어 온 불신을 해소하고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해 나가는데 있어 중요한 견인차 역할을 하여 왔다. 그 동안 다양한 경제 및 사회문화 교류협력을 통해 남북한간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실질적인 남북관계 개선을 선도하여 왔다.

(1) 경의선과 동해선 연결

남북간 철도·도로 연결사업은 2000년 제1차 및 제2차 남북장관급회담의 합의내용에 따라 2000년 9월 우리측 지역공사를 위한 기공식을 시작으로 추진되어 왔다. 남과 북은 경의선과 동해선의 철도·도로를 연결하기 위한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 공사를 위해 비무장지대의 철책을 걷어내고 지뢰를 제거하였다.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도로의 연결은 물류비를 절감함으로써 남북간 직교역이 활기를 띠게하고, 상품의 생산과 판매에서도 가격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나아가 시베리아횡단철도(TSR), 중국횡단철도(TCR)와 연결될 경우에는 한반도가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동북아 물류 중심국가’로 부상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2) 금강산 관광

금강산 관광사업은 남북관계 상황변화속에서도 꾸준히 지속되면서 한반도 긴장완화와 전쟁위협 감소, 신뢰형성에 기여해 왔다. 또한 대외적으로 한반도 안정과 평화이미지를 제고하여 외국인 투자와 국제행사 유치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등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금강산 관광은 1998년 11월부터 해로를 통해 시작되었으며, 2003년 2월부터는 육로를 통해서도 이루어졌다. 2003년 11월말 현재 총 관광인원은 580,000여명에 달하고 있다.

(3) 개성공단 개발사업

개성공단 개발은 1999년 10월 우리 민간기업과 조선아세아태평양평화위원회(아태)간에 의향서 수준의 합의를 채택한 이후, 제5차 남북장관급회담(2001. 9)과 제2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2002. 8), 개성공단조성공사 착공식(2003. 6) 등의 과정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갖춘 공단개발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다.

북한은 2002년 11월 개성공업지구법을 제정하였으며, 남북한은 개성공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개성공단의 통신·통관·검역에 관한 합의를 채택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개성공단 건설은 인프라가 부족한 북한 지역에 공업단지를 조성함으로써 우리 기업들의 경제활동에 적합한 환경을 만들어 간다는 의미를 가진다.

(4) 경제협력을 위한 제도마련

지금까지 남북경제협력의 장애가 되어온 법률적·제도적 보장과 관련하여 투자보장, 이중과세 방지, 분쟁해결, 청산결제 등 4대 경제협력 합의서가 발효되었다. 이는 우리 기업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남북경협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음을 의미한다.

(5) 교역의 확대

1989년 1,872만 달러 규모로 시작된 남북 교역은 2002년에 6억 4천만 달러, 2003년에 6억 7천만달러(11월말 기준) 규모로 증대되었다. 남북 교역과 경제협력에 참여한 업체수도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거래되는 품목도 다양해지고 있다.

남북경협은 우리의 자본과 기술을 북한의 노동력과 결합시켜 호혜적인 경제이익을 창출할 수 있게 한다. 또한 북한내 산업에 대한 연관효과를 통해 남북간 경제격차를 감소시킴으로써 통일비용도 경감할 수 있다.

이처럼 남북이 경제협력을 심화시킴으로써 경제공동체를 형성해 갈 수 있으며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민족 전체의 복리를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통일의 기반을 닦는데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6) 스포츠·문화분야 교류

1990년대 초반이후 중단되었던 남북 왕래행사가 재개되어 대규모 방북 방남 행사가 성사되었으며, 1998년 이전 3건에 불과하던 협력사업은 1998년 이후 28건으로 증가하였다. 내용면에서도 문화예술, 체육, 방송, 학술, 종교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으며, 여성·청년 등 다양한 계층으로 폭이 넓어지고 있다. 특히 남북정상회담 이후 방남행사가 성사되면서 방북행사 일변도에서 벗어나 쌍방향 교류가 늘어나고 있다.

(7) 인적교류의 확대

남북간의 교류분야가 이산가족, 문화, 예술, 종교, 체육, 관광, 언론 등으로 다양화되면서 북한을 방문한 남한 주민은 2000년 7,280명, 2001년 8,551명, 2002년 12,825명, 2003년 13,398명(11월말 기준)에 이르고 있다. 아울러 남한을 방문한 북한 주민은 2000년 706명, 2001년 191명, 2002년 1,052명, 2003년 997명(11월말 기준)에 달하고 있다

한편 남북간 인적·물적 교류의 확대에 따라 남북간 사람과 물자의 출입입무를 담당하는 남북출입사무소가 2003년 11월에 개소되었다. 남북출입사무소의 설치는 남북관계 진전의 뚜렷한 징표로서 앞으로 남북간 교류협력을 통한 평화통일과정에서 많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 이 주제를 다룰 때의 강조점 |

남북간에 어떠한 교류협력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하고, 남북 교류협력이 어떻게 상호 신뢰 및 이해 증진에 기여하는지 생각하게 한다.

남북 경제협력이 왜 남북 모두에 이득이 되는지를 설명하고, 남북경협이 궁극적으로 남북경제공동체를 형성하게 됨으로써 평화적 통일 기반을 닦는데 기여할 것임을 이해시킨다.

남북 경제협력의 증진은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 통일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보다 나은 경제생활과 삶의 질 향상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인식시킨다.

다. 국가 안보

튼튼한 안보는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예방하고 유연한 대북정책을 구사할 수 있는 바탕이 된다. 튼튼한 안보를 위해서는 우리의 군사력과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북한의 위협에 단호하게 대응하는 물리적 역지력의 유지(Peace Keeping)와 함께 화해협력을 통해 남북간 평화를 정착시켜나감으로써 안보위협을 없애 나가는 노력(Peace Making)을 병행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튼튼한 안보와 자주국방태세가 필요하다.

안보는 국가의 존립을 지켜주는 보호막이며, 발전의 토대가 된다. 안보 없는 국가는 존재할 수 없다. 따라서 국가의 생존과 이익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군사적 차원의 능력을 확보하여 건설하고 강력한 안보태세를 유지하고, 나아가 자주국방태세를 갖추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남북으로 분단되어 군사적으로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는 우리에게 스스로 안보를 확고히 지켜나갈 수 있는 자주국방역량의 강화가 필요하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선 독자적 군사력에 있어 대북열세를 극복하고, 군운영체제를 효율화하며, 미래 안보동맹의 변화에 대비하여 연합지휘체제를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국가안보와 관련하여 한미동맹의 역할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

한미동맹은 지난 50년 동안 한반도 유사시 압도적 전력우위를 보장함으로써 북한의 남침을 방지하는 연합억지전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나아가 동북아시아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지역 ‘균형자’, ‘안정자’로서의 기능을 수행해 왔다.

이러한 한미동맹은 한반도의 통일과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통일 이후 한반도의 지정학적 특수성으로 인한 잠재적인 안보위협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한미동맹은 우리에게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계속 발전시켜나가야 한다.

그러나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이 한국의 위상변화를 제대로 반영해야 한다는 일부의 의견도 제기되고 있는 바, 이런 점들은 국민적 의견 수렴과 한미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남북관계 개선은 한반도의 안보위협을 해소하는데 기여한다.

남북관계 개선은 북한의 대남 적대감을 해소하고 평화를 증진시킴으로써 안보위협을 근원적으로 해소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북한의 군사적 요충지인 금강산 지역에서 관광이 이루어지고 동·서 군사분계선지역을 왕래하며 철도와 도로의 연결이 추진되는 것 등은 남북간 화해협력과 평화를 증진시켜 안보위협을 줄여나가는 적극적 의미의 안보라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굳건한 안보태세의 확립과 적극적인 남북관계 개선은 한반도를 탈냉전화시키고 평화를 만들어 가는 국가안보의 두 축이라고 할 수 있다.

| 이 주제를 다룰 때의 강조점 |

국가안보와 관련하여 자주국방의 중요성을 이해하도록 한다.

국가안보에 있어서 한미동맹의 의미를 현실적으로 인식하고, 우리의 국익과 동북아질서의 안정이라는 관점에서 한미관계를 바라보는 시각을 갖도록 지도한다.

튼튼한 국가안보가 전제되지 않고서는 남북관계가 진전될 수 없다는 점과 남북관계의 진전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가져옴으로써 안보위협을 해소해 나가는 상호 보완관계임을 이해시킨다.

6. 통일국가의 목표와 방향

가. 분단국 통일 사례의 교훈

독일, 예멘 등 분단국가들이 통일을 이룩한 과정이나 방법은 각기 달랐지만, 아직 분단을 극복하지 못한 우리는 그들의 다양한 통일 경험으로부터 몇 가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통일 이전에 기존의 분단상태가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노력하였다.

예멘의 경우 북예멘과 남예멘 사이에 분열과 갈등이 있었지만, 이미 1981년 12월에 ‘남북예멘 협력 및 조정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고, 이를 바탕으로 상호 적응하는 협상 과정을 지속하였다.

독일은 비록 동독체제 붕괴에 따라 서독으로의 편입통일이 이루어졌지만, 그 이전부터 양측은 이산가족문제 해결, 정치범 석방 거래 등 분단으로 인한 인간적 고통의 해소와 더불어 대내외적인 안보위협에 슬기롭게 대처하여 평화적 분단관리에 많은 주의를 기울였다. 1972년 12월 양측은 ‘동서독 기본조약’을 체결하여 쌍무적 관계를 조정·관리하는 한편, 1973년 유엔 가입 이후 서로 다방면에 걸친 통신, 교류, 협력 등을 확대하여 체제 동질화를 추진하였다.

통일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과제들을 실천해 나갔다.

첫째, 두 정치체제간에 화해와 협력 관계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였다. 분단 기간 중에 대립과 갈등 요소가 완전히 소멸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당사자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대립과 갈등은 격화될 수도 있고 완화될 수도 있다. 분단 시기에 화해협력 관계를 공고히 할수록 평화적 통일의 가능성은 커진다고 할 수 있다.

둘째, 국가적으로는 분단되었다고 해도 이 기간 동안 민족적 이질화가 심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노력하였다. 분단 기간이 길어지고 관계가 대립적일수록, 두 지역 주민간에 한 민족으로서 동질성이 약화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화해와 협력 관계에 기초하여 꾸준히 교류와 협력을 발전시켜야 이념대립으로 훼손됐던 민족공동체의 회복이 가능하고, 동질성을 보존 확대할 수 있으며, 통일을 이루려는 의지도 자연히 높아지게 된다.

셋째, 분단 국가의 통일은 기본적으로 민족 내부의 자결권 문제였지만, 주변국가의 이해와 협조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를 위해 노력했다. 주변국가의 입장에서는 분단국의 통일을 두 국가가 하나로 합쳐져 더 강력한 국가가 새롭게 탄생되는 것으로 여길 수 있다.

따라서, 통일국가의 주체는 새로운 국가의 탄생이 지역의 안정과 번영에 도움이 되는 것임을 설득할 수 있는 외교적 지혜와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두 국가의 통일이 평화적으로 이루어지며 주변국의 국익과 상응하는 것일수록, 또한 양측 주민의 확고한 동의에 기반할수록 주변국 설득은 용이해 진다.

통일 이후에는 생활조건의 균형적 발전과 내적 통합을 위해 노력하였다.

첫째, 통일 직후에는 상이한 체제, 제도와 문화의 과거 유산이 존속하고 있기 때문에 갈등이 발생할 소지가 많다. 특히 분단이 장기간 지속되었기 때문에 통합된 지역 양측 주민의 가치관, 생활 습관과 수준에서 상당한 격차가 존재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서 서로 상대방의 처지를 이해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다. 특히 현실적으로 우세한 쪽이 다른 쪽을 지속적으로 도와주는 마음의 자세를 갖추어야 하고, 양측 주민이 서로 화합하고 협력해 갈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둘째, 통일 직후에는 국가 통합에 관한 여러 문제를 처리하는 것이 급선무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양측 지역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투자와 노력, 그리고 적극적인 비용분담 의지가 필요하다.

분단이 장기간 지속되었던 경우 양측 주민을 상호 동등한 권리를 향유하는 한 국민으로 통합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양측 지역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 수준상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장기간의 노력이 필요하다.

분단국의 통일 사례에서 보듯이 통일 이전, 통일 과정, 통일 이후의 여러 문제들을 원만히 해결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통일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분단국의 통일 사례로부터 얻은 시사점을 참고하여 해당 문제들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해 나가야 할 것이다.

| 이 주제를 다룰 때의 강조점 |

통일 이후의 후유증을 줄이려면 통일 이전부터 분단을 평화적으로 관리 하면서 교류와 협력의 관계를 증진시켜야 함을 강조한다.

평화, 교류와 협력은 분단비용과 고통을 줄이는 정책이며, 이는 궁극적으로 통일을 위한 투자임을 이해시킨다.

통일이라는 것은 단순히 분단된 국가가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질화되었던 민족의 두 부분이 다시 하나로 동질화되어 가고 민족공동체를 재구성해 가는 과정임을 강조한다.

나. 한반도 통일의 촉진 및 장애요인

한반도의 통일 환경이 이전 분단국가의 통일 환경과 모든 면에서 동일한 것은 아니다. 남북관계 개선과 통일의 촉진·장애요인을 살펴봄으로써 한반도 통일 여건의 특수성을 이해할 수 있다.

(1) 통일 촉진요인

첫째, 국제 환경면에서 볼 때 탈냉전의 추세는 남북한 관계개선과 한반도 통일을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탈냉전의 국제질서는 비록 유동성과 복잡한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지만, 과거 냉전시대와 달리 국가간에 개방과 협력을 촉진하고 갈등을 축소시켜 나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남북분단이 냉전의 산물인 만큼 국제적인 탈냉전 추세는 분단을 극복하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둘째, 동북아시아 차원에서 주변 국가들의 대북 관계개선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 북한의 개방과 변화, 나아가 남북통일을 촉진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다. 특히 미국과 일본의 대북관계 정상화는 북한체제의 폐쇄성을 완화시키고, 나아가 북한의 개방화 및 체제개혁을 이끌어 내는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다방면에서의 남북교류협력은 북한사회의 질적 변화, 상호 신뢰 구축, 그리고 민족동질성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남북한간의 사회·경제적·문화적 교류의 확대는 통일을 위해 바람직한 것이다.

넷째, 현재 북한이 직면한 경제난은 그들의 개혁·개방을 촉진하는 한편, 대남 협력적 자세를 유지토록 하는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북한은 경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외개방과 협력을 모색해야 하는데, 이 경우 북한이 남한에 대하여 적대적인 태도만 취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다섯째,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성숙은 통일을 촉진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민주화의 신장은 통일정책 추진에 대한 폭 넓은 국민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게 함으로써 우리의 통일 역량을 극대화 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통일 장애요인

우선, 북한의 변치 않는 대남 적화통일전략은 커다란 장애요인이다. 비록 남북기본합의서에는 서로 공존과 협력의 원칙들을 포함하고 있지만 북한의 대남 적대적 입장 및 체제전복 노선은 아직 공식적으로 변하지 않고 있다.

둘째, 남북한간의 이질화현상이다. 지난 반세기 동안 남한 사회가 정치적 민주화와 다원화를 이룩한 반면 북한 사회는 여전히 유일지배체제와 폐쇄적인 정치체제를 고수하고 있다. 이런 사회구조적 차이에 의한 이질화의 심화는 결국 남북통합을 어렵게 만든다.

셋째, 우리 사회 내의 소모적인 국론분열도 통일의 장애요인이 된다. 우리 사회 내부의 끊임없는 보수와 진보간의 갈등, 이른바 남남갈등은 국민통합 기반의 형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지역·계층·세대간의 갈등양상 또한 통일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넷째,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시아의 세력균형구조가 남북관계 개선과 통일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지역 내 국가들간의 역학관계는 현

상변화보다는 현상유지에 초점을 두고 전개될 가능성이 있고,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 확보를 둘러싸고 주변 4국의 대립구도가 심화될 수도 있다.

| 이 주제를 다룰 때의 강조점 |

한반도 통일의 특수성을 남북관계 개선과 통일의 촉진요인과 장애요인을 통해 이해하도록 지도한다.

통일 장애요인 극복을 위해 국민화합을 통한 우리 사회의 건전한 발전과 소모적 갈등의 해소가 중요함을 강조한다.

다. 우리의 통일방안

우리의 통일방안은 1989년 국회 통일특별위원회의 공청회 등 국민적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채택된 이후 보완·발전시켜 온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이다.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하나의 민족공동체를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점진적·단계적으로 통일을 이루어 나간다’는 기초 위에서 통일과정을 「화해 협력단계», 「남북연합단계», 「통일국가 완성」의 3단계로 설정하고 있다.

(1) 화해협력 단계

‘화해협력단계’는 남북한이 적대와 불신, 대립관계를 청산하고, 상호 신뢰 속에 남북화해를 제도적으로 정착시켜 나가면서 다방면의 교류협력을 내실있게 실시함으로써 평화 공존을 추구해 나가는 단계이다.

즉, 남북한이 서로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가운데 분단상태를 평화적으로 관리하면서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분야의 교류협력을 통해 상호 적대감과 불신을 해소시켜 나가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2) 남북연합단계

‘남북연합단계’는 하나의 완전한 통일국가 건설을 목표로 이를 추구해 나가는 과정에서 남북한이 잠정적인 연합을 구성하여 평화를 제도화하고, 민족공동 생활권을 형성하면서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과도기적 통일체제이다.

이 단계에서는 남북한이 합의하는 데 따라 각기 대외적 주권을 유지하되 남북정상회의·남북평의회·남북각료회의·남북공동사무처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게 된다.

남북은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을 통해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남북연합단계’와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이는 남북한이 세부적인 통일방안이나 최종 통일목표에 합의한 것은 아니지만 현재의 체제를 상호인정하고 평화공존하면서 교류협력을 통해 단계적으로 사실상의 통일을 실천해 나간다는 데 공통인식을 가지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또한, 북한이 기존의 연방제에 ‘낮은 단계’라는 단계를 설정하고 교류협력을 중시하는 점진적인 통일과정을 상정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우리의 연합제 구상에 접근해 온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이다.

(3) 통일국가 완성단계

마지막 단계인 ‘통일국가 완성단계’는 ‘남북연합단계’에서 구축된 민족공동의 생활권을 바탕으로 남북한 두 체제를 완전히 통합하여 정치공동체를 실현하는 것으로서 1민족 1국가의 통일을 완성하는 단계이다.

즉, 남북한 의회대표들에 의해 마련된 통일헌법에 따라 민주적인 선거를 통해 통일정부, 통일국회를 구성하고 두 체제의 기구와 제도를 통합함으로써 1민족 1국가의 통일을 완성하게 될 것이다.

이처럼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과도기적 통일체제인 남북연합단계를 거쳐, 남북한간 이질감을 해소하고 민족공동체를 형성하는 조건 위에서

점진적으로 통일국가를 형성하는 방안이다. 통일국가로 발전하는 과정은 반드시 평화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남북한의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우리의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서는 통일국가의 미래상으로 민족구성원 모두가 주인이 되며, 민족구성원 개개인의 자유, 복지와 인간존엄성이 보장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임을 제시하고 있다.

| 이 주제를 다룰 때의 강조점 |

우리의 통일방안은 통일과정을 화해협력단계, 남북연합단계, 통일국가 완성단계로 설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단계를 밟는 것이 현실적이며 바람직한 경로임을 이해하도록 지도한다.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민족구성원 개개인의 자유와 복지,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제시하고 있음을 알게 한다.

라. 통일국가의 미래상

통일국가는 남북격차와 이질감의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통합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통일 직후에는 남북한 사이에 분단의 결과로 인해 여전히 경제적 격차, 정치적 가치관의 차이, 사회·문화적 관습의 차이가 남아 있을 가능성이 크다. 통일국가는 이러한 남북격차와 이질감의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통합정책을 추진하여 통일의 결실이 모든 구성원에게 고루 향유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통일국가는 민족구성원 모두에게 자유·복지·인간존엄성을 보장하는 선진복지국가를 실현해야 한다.

‘자유’란 분단으로 인한 민족구성원 모두의 고통과 불편이 사라지고 자율과 창의가 존중되며 정치적·경제적 자유를 확보하는 상태를 말한다. ‘복지’는 민족의 총체적 역량을 크게 신장함으로써 풍요로운 경제를 이룩하여 그 혜택이 민족구성원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인간존엄성’이란 분단으로 인한 억압적 구조를 타파하여 더 이상 인간을 수단으로 간주하지 않고 개인의 인격과 가치를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통일국가는 선진민주사회를 실현해야 한다.

통일국가는 정치적으로 자유민주주의체제, 경제적으로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를 이룩할 수 있는 시장경제질서를 바탕으로 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선진민주사회’ 실현을 지향한다.

통일국가는 평화의 중심국가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통일국가는 민족공동체 성원들의 삶을 질적으로 드높일 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는 다가올 아시아 태평양 시대를 선도하고, 나아가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기여하는 주역국가로 발돋움하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특히, 통일국가는 동북아 지역평화는 물론 세계평화를 위한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국제사회에서 인정받는 ‘평화의 중심국가’가 되어야 할 것이다.

| 이 주제를 다룰 때의 강조점 |

통일국가의 실현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우리가 원하는 통일이 개인의 일상생활에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이해하도록 한다.

통일국가의 실현이 한반도의 미래와 세계 평화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력을 이해하고 그 의의를 공감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7. 통일을 위한 준비자세

가. 분단 상황 이해와 판단 능력의 신장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분단 상황에 대한 객관적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객관적 이해를 바탕으로 통일 노력의 방향과 남북관계 개선의 방법 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의 실상에 대한 이해와 한반도 주변환경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1) 북한의 실상에 대한 이해

북한의 실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변하는 부분과 변하지 않는 부분을 구별해서 이해해야 한다. 북한의 수령 중심 정치 체제, 주체사상 등은 변하지 않는 부분이지만 북한의 경제 상황, 생활 여건 등은 점차 변화하고 있는 부분이다. 북한의 모습 중 변화 가능성이 적은 부분을 정확히 이해하고 북한 사회의 특성, 국제 상황 등에 영향을 받아 변화하는 북한의 모습을 변화의 흐름에 맞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북한의 지도층과 일반 주민을 구분하여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북한의 정치 체계와 경제 체계를 계획, 운영하는 지도층과 정부의 국가 운영에 따라 생활하는 일반 주민의 모습을 동시에 이해할 수 있어야만 북한의 실상을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대외적으로 드러난 북한의 모습과 일반 주민의 일상적 모습은 북한을 구성하는 두 축이 되며 앞으로 북한과의 평화 협력과 동질성 회복을 위해서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다.

마지막으로 북한의 실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정치 경제뿐 아니라 북한의 문화, 교육, 생활 모습 등에 대한 전반적 이해가 필요하다.

지금까지는 주로 북한의 정치·경제에 많은 관심을 가졌지만 북한 사회는 각 요소가 긴밀히 연관되어 있고 상호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어느 한 부분만 이해해서는 북한을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 없음을 유의해야 한다.

(2) 한반도 주변환경에 대한 이해

분단 현실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환경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한반도가 분단된 것은 미·소의 분할 점령과 우리의 자주적 독립 역량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지금의 분단 상황을 극복하고 남북관계를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는 자주적 역량 강화뿐만 아니라 주변국의 협력이 필요하다.

주변 국가들은 한반도에 대하여 여러 측면에서 이해 관계가 서로 얽혀 있으므로, 자국의 이익을 지키려고 한반도의 문제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해 왔다. 그러나 주변국들은 한반도에서 긴장이 고조되거나 전쟁이 재발하면 자국의 이익에 배치된다고 판단할 경우 한반도의 현상 유지를 원하게 된다. 우리는 주변국들의 이러한 입장을 정확히 이해하여 통일국가를 이루는 데 유리한 여건을 창출해 내도록 해야 한다.

(3) 통일문제에 대한 종합적 판단 능력 증진

북한의 상황과 한반도 주변의 환경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통일 문제에 대해 종합적인 판단 능력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부분적인 정보 파악과 체제우월적·이념적 접근을 지양하고 다양한 정보 확인과 객관적인 이해를 추구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의 입장에서 남북분단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주변 강대국의 협조를 이끌어냄으로써 평화 통일을 이룩하는 데 긍정적 역할을 하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 이 주제를 다룰 때의 강조점 |

북한의 실상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변하는 부분과 변하지 않는 부분을 구별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한반도에 대한 주변국들의 다양한 입장을 이해하여 통일국가를 이루는데 유리한 여건을 조성해야 함을 이해하도록 한다.

통일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다양한 정보 확인과 객관적 이해가 중요함을 강조한다.

나. 통일에 대한 주인의식과 열린 자세 함양

남북한이 분단된 지 반세기가 지났다. 시간이 지날수록 분단의 상황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어 통일에 대한 염원과 관심이 점차 줄어들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우리는 분단 상황의 영구화를 해소하고 한반도 통일에 대한 관심과 의지를 확고히 하기 위해서 통일에 대한 주인 의식과 북한에 대한 열린 자세를 함양하여야 한다.

(1) 통일에 대한 주인의식

통일에 대한 소극적이고 방관적인 태도는 통일을 실현하는 데 큰 걸림돌이 된다. 통일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통일의 주역인 우리 국민각자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때 앞당길 수 있다.

또한, 통일은 특정한 사람이나 단체의 임무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책임이며 권리이다. 통일을 위해 북한과 대화나 교류를 직접적으로 준비하고 책임지는 정부나 민간 단체가 있지만, 이는 역할 분담을 통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국민 개개인이 비록 통일과 관련된 일을 직접 담당하지는 않더라도 통일은 곧 우리 자신의 문제임을 깊이 인식하고 노력하는 주인의식을 가져야 한다. 이러한 국민 개개인의 주인의식이 결집될 때 우리의 통일역량이 강화되어 통일을 실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열린 자세

우리는 북한의 문화나 의식에 대해서 ‘나와 다르다’는 것 때문에 배제

하거나 경멸해서는 안 되며, 그 ‘다름’을 인정해야 한다. 우리와 문화나 의식이 다르다고 해서 북한이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없다. 오히려, 반세기 동안 체제와 이념이 다른 사회에서 상호 교류없이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와 다른점이 많을 수 밖에 없다.

통일을 위해서는 먼저 ‘다름’을 인정하고 이를 해소해 나가야 한다. 그 래야만 그 속에서 서로의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으며, 그 차이를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북한의 입장을 존중하고 남북한의 차이를 조화롭게 일치시켜 나가기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해야할 것인가에 대한 합의를 도출해 내야 한다.

그러나, 다름을 인정하는 열린 자세가 무조건적인 수용을 뜻하는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 북한의 문화나 의식을 열린 자세로 접근한다고 하여 잘못된 부분까지 수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름’을 인정하면서 남북 공동의 가치와 정체성을 발견하고 확대하여 평화와 번영의 민족공동체를 구현하는 것이 필요하다.

| 이 주제를 다룰 때의 강조점 |

통일이 자신의 문제임을 깊이 인식하고 노력하는 주인의식을 갖도록 지도한다.

남북의 다름을 인정하고 남북의 공존 문화를 형성해 갈 수 있는 열린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한다.

다. 적극적인 통일외지 확립

남북통일은 우리 민족 전체의 운명과 이해가 달려 있는 중요 과제이다. 따라서, 통일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국민 개개인 모두가 확고한 통일실현 의지를 내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1) 서로 돕고 나누는 삶의 실천

통일 실현 의지는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구현되어야 한다. 통일은 남한과 북한의 체제간 통일이면서 사람과 사람의 통합이다. 우리는 북한 사람을 이해하고 그들과 조화롭고 동등한 인간 존엄성을 향유하기 위하여 지금부터 북한 주민들에게 인간의 존엄성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도움을 주어야 한다. 이러한 노력들은 통일 이후에도 북한 주민과 더불어 평화롭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바탕이라고 할 수 있다.

(2) 갈등 해소 노력을 통한 상호 발전 추구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보수와 진보간의 갈등, 세대간의 갈등, 지역간의 갈등과 같은 문제가 통합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어느 사회나 갈등이 없을 수 없으나 갈등을 해소하고 조화와 상호 발전을 이루려는 의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는 이런 현상을 직접 경험하면서 갈등을 해소하고 상대방을 이해하도록 힘써야 한다. 우선 토론과 열린 대화를 통해 자신의 이익만 내세우려는 자세를 지양하고 상대방의 주장에도 관심을 기울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갈등 해소의 노력들이 지속적으로 추구되어 국가적으로 축적된다면 앞으로 통일과정에서 제기되는 여러가지 문제들을 해소하는 데 중요한 자산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지금부터 갈등해소를 통한 상호 발전을 추구하는 훈련을 통해 통일 실현 의지를 구체화해야 할 것이다.

| 이 주제를 다룰 때의 강조점 |

갈등해소를 통하여 상호 발전을 추구하는 훈련과 구체적인 나눔 활동을 통해 통일 실현 의지를 내면화하도록 지도한다.

라. 남북한 공존문화 확립

우리는 평화통일과 민족공동체의 번영을 위해 남북한 공존문화 확립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공존문화 확립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

(1) 전통 문화의 발전적 계승

남북한은 분단되기 전에 동일한 문화 전통을 유지해 왔다. 통일시대는 상이한 제도와 사상속에서 긴 세월을 보내온 남북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가는 시대이므로, 이전의 공동체 문화를 되살려 나갈 필요가 있다. 남북한의 이질화를 해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질적인 전통문화 요소를 계승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다.

먼저 우리 민족의 상부상조의 전통을 되살려 상호인정과 민주적 합의 도출 등 공존의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야 한다. 우리는 전통적으로 품앗이, 두레와 같은 좋은 공동체 문화를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공동체 문화가 현대의 상황과 흐름에 맞게 적절히 보완되어 계승된다면 통일이 되어 서도 전통 문화를 바탕으로 남북한간의 공동체 문화를 훌륭하게 세워 나갈 수 있을 것이다.

(2) 공존문화의 확인과 교류

우리는 북한과 동질적인 문화 요소를 계속 확인하고 지속적으로 교류할 필요가 있다. 즉, 북한과 언어문화, 청소년문화, 결혼문화 등과 같은 면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동질적인 부분을 확인해 나가야 한다.

비록 언어가 이질화된 부분이 있지만 남북한간의 의사소통은 별 어려움 없이 가능하다는 것은 언어문화의 동질적인 면을 보여주며, 새로운 문화를 추구하고 호기심을 해소하기 원한다는 점에서 동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애를 통한 결혼이 선호되고 자식의 진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측면에서도 남북한은 동질적인 문화를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남북한의 이질적인 부분만 강조하기보다는 남북한의 동질적인 문화를 확인하고 교류를 통해 상호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 이 주제를 다룰 때의 강조점 |

진정한 남북 화해협력시대를 열어 나가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사회 내부에서 서로의 입장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합의를 도출해 나아가는 공존의 문화를 확립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게 한다.



Peace and
Prosperity

통일교육의 지도원칙과 실천방향

통일교육의 지도원칙

통일교육의 실천방향

지도상 유의사항

들어가면서

통일교육의 효과는 통일교육 실행을 위한 지도원칙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즉, 어떤 입장과 자세에서 어떻게 가르치는 지가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다

통일교육의 목표와 내용체계가 잘 설정되었다고 해서 통일교육이 저절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목표와 내용, 지도 방법이 유기적으로 잘 결합되어 실시될 때에 그 효과를 볼 수 있다. 통일교육의 지도원칙은 통일교육의 목표와 내용, 지도방법을 유기적으로 결합시켜 통일교육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여기서는 통일교육을 효과적으로 실행하는 데 필요한 지도원칙을 통일교육의 목표에 따라 설정하고, 그 원칙을 달성하는데 도움이 되는 실천방향과 지도상의 유의사항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통일교육을 지도하는 교수자는 여기에서 제시하고 있는 지도원칙과 실천방향에 따라 전문성과 자신감을 가지고 학습자를 교육하여야 한다. 또한, 북한 및 통일문제에 관한 학습자의 자율성, 문제해결 능력, 합리적 사고력 및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1. 통일교육의 지도원칙

가. 객관적 이해와 판단능력 배양의 지도원칙

(1) 통일환경과 남북한 실상에 관한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정보제공

남북한을 둘러싸고 있는 통일환경은 국내외 정세에 따라 수시로 변하고 있다. 그러므로 통일교육에서는 우리의 현실에 기초하여 변화하는 통일환경과 북한의 실상에 관해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학습자의 능력을 강조해야 한다.

통일환경 및 남북한의 실상에 대한 학습자의 정확한 이해를 도모하기 위하여 교수자는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정보를 수시로 활용하거나 제공해 주어야 한다.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한 학습자들의 이해와 판단 경험은 그들로 하여금 공정하며 균형 잡힌 시각 속에서 통일 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해 준다.

(2) 개방적이고 합리적인 대화와 토의 중시

통일환경과 남북한의 실상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수자가 통일에 관련된 획일적 이념이나 사상 혹은 주관적 관점을 주입하려 해서는 안된다. 교수자는 개방적이고 합리적인 대화와 토의를 통해 학습자들이 통일 문제에 대하여 자신의 관점을 스스로 설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학습자들은 개방적이고 합리적인 대화와 토의 과정을 통해 타인의 의견 및 권리 존중, 의사 경청 기술, 협상 능력, 합의 도출 기능 등과 같은 민주적인 의사결정과 태도를 배울 수 있다. 그러므로, 통일교육은 개방적이고 합리적인 대화와 토의에 바탕을 두고 실시되어야 한다.

나. 통일·안보관 정립의 지도원칙

(1)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확신과 민족공동체 의식의 내면화 강조

교수자는 학습자들이 바람직한 통일·안보관을 정립하도록 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자유민주주의의 가치와 민족공동체 의식의 중요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교수자는 단순한 정부형태의 비교를 넘어서 생활 방식으로서의 자유민주주의의 가치와 탁월성에 대하여 학습자들이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또한, 교수자는 학습자로 하여금 통일 문제를 민족공동체의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남북한 주민의 '다름'을 강조하기보다는 '같음'과 '유사성'에 주목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2) 평화적 통일관 및 포괄적 안보관의 정립 중시

교수자는 학습자들에게 한반도의 통일은 평화적 방법에 의해 이루어져야만 한다는 사실을 강조해야 한다. 인간다운 삶의 조건을 파괴하는 비평화적 방법에 의한 통일은 남북한 모두에게 커다란 피해를 가져다주기 때문이다.

또한, 교수자는 실리 위주의 냉엄한 국제 질서와 한반도의 군사적 대치 상황 속에서 국가를 유지·보전하기 위한 포괄적 안보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학습자들 사이에 형성할 수 있어야 한다. 즉, 교수자는 북한의 위협에 대비한 군사적 안보와 함께 경제적 안보, 문화적 안보, 생태적 안보 등과 같은 포괄적 안보의 중요성에 바탕을 둔 건설적인 안보관을 학습자들이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 평화·협력의 자세와 통일 실현의지 함양의 지도 원칙

(1) 협동과 상호 존중의 풍토 조성

남북한간의 끝없는 체제 경쟁과 대립은 상호불신과 갈등을 유발함으로써 지금까지 남북 통일의 커다란 걸림돌이 되어 왔다. 우리의 통일이 남북한간의 교류협력 관계의 증진과 밀접한 관계가 있듯이 통일교육에 있어서도 학습자들간의 협동과 상호 존중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교수자는 통일교육의 실행에 있어서 협동학습이나 소집단 프로젝트 등과 같은 구체적인 교수기법의 적용을 통하여 학습자들로 하여금 협동·상호 의존·상호 존중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자각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

따라서, 교수자는 학습자로 하여금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고, 평화적으로 갈등을 해결하며, 공동 목표 달성을 위하여 서로 협력할 수 있는 다양한 실천 기회들을 제공해 줄 필요가 있다.

(2) 적극적인 통일 실현의지의 함양

통일은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교수자는 학습자의 적극적인 통일외지 함양에 각별한 노력과 열정을 기울여야 한다. 그런데 학습자의 상황과 필요를 고려하지 않은 채 교수자가 일방적으로 통일의 당위성만 강조하면 학습자의 참여와 관심을 유도하지 못하여 자발적인 통일 실현 의지를 이끌어 내기 어렵다.

따라서, 교수자는 학습자가 흥미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학습자의 입장에서 출발하는 통일교육의 실행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교수자는 학습

자의 생활과 직결될 수 있는 구체적인 통계 수치 등과 같은 실증 자료를 제시함으로써 통일의 필요성을 실감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교수자는 학습자의 통일 실현 의지를 행동으로 연결시켜 줄 수 있는 다양한 체험과 활동 기회를 제공·알선해 줄 수 있어야 한다.

2. 통일교육의 실천방향

앞에서 제시된 지도 원칙이 올바르게 구현되기 위해서는 통일교육 현장에서 교수자들이 통일교육의 실천방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깊이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가. 통합적 교육

통일교육은 학습자의 지·정·의 3요소를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방향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즉, 지식면에서는 북한 및 통일문제에 관하여 객관적인 지식체계와 정보를 가르치며, 통일이라는 당위적이고 규범적인 의미에 내재된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를 바라보는 사고 기능과 판단력을 증진시키는 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정서면에서는 학습자들이 한반도 통일문제의 의사결정자라는 자긍심과 확신을 심어줄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의지적인 면에서는 통일 실현과정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고통과 희생이 불가피하므로, 국민 개개인이 스스로 통일실현의지와 인내력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되어야 한다.

나. 행동지향적 교육

통일교육은 분단 과정이나 통일정책에 대한 무기력한 관념을 지닌 학습자들을 길러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통일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자세를 지닌 학습자들을 길러내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통일교육은 능동적인 사회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행동지향적 교육이 되어야 한다.

통일교육은 갈등의 합리적 해결능력, 비판적 창조적 사고능력, 협동능력 등과 같은 민주사회적 기능들을 실천해 볼 수 있는 다양한 기회들을

제공해 줌으로써 학습자들에게 통일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어야만 한다.

다. 적극적 평화를 지향하는 교육

통일교육은 학습자들에게 적극적인 평화의식을 심어 주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물론 이때의 평화란 단순히 갈등과 전쟁 등이 없는 상태라는 소극적인 의미가 아니다. 진정한 평화란 전쟁이 없는 상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을 계발할 수 있고, 나아가 다른 사람과 조화를 이루면서 모든 갈등과 분쟁을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토론과 타협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인간공동체를 창조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따라서, 적극적인 의미에서의 평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기근, 빈곤, 무지, 질병, 전쟁 등으로부터의 해방, 비참한 주거생활로부터의 해방, 자연환경의 보호, 국가와 사회의 민주화 등과 같은 사람다운 삶의 조건들이 형성되어야 하는 것이다.

통일교육은 적극적인 평화를 위한 삶의 조건들에 대한 소양을 높임과 동시에 그러한 삶의 조건들을 만들어 내기 위하여 실제적인 노력을 경주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드는 일과 연관되어야 한다. 통일교육은 학습자들의 마음속에 적극적인 평화의식을 함양시켜 그들 스스로 통일의 중요성을 체감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주어야 한다.

라. 평생교육

학습자들이 통일에 관하여 백지상태에 있다고 가정하는 것은 그릇된 생각이다. 그들은 가정과 매스 미디어 등을 통하여 통일문제에 대하여 비록 체계적이지는 않을지라도 나름대로의 지식과 관점을 내면화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통일교육은 학령기 교육에 치중해 온 것이 사실이다. 통일교육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유아와 학생, 성인을 대상으로 한 통일교육이 계속성의 차원에서 연계성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최근에 시민단체들에 의하여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통일교육이 점진적으로 활성화되고 있으나, 유아 교육기관 및 가정교육은 통일교육의 사각지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통일교육은 가정, 유아 교육기관, 학교, 군대, 사회교육에서 체계적인 계획에 따라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마. 테크놀로지에 바탕을 둔 교육

교과서에 제시된 문자정보나 낡은 사진정보를 통하여 통일교육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통일교육에서도 학습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다양한 테크놀로지들을 활용해야 한다. 예컨대 애니메이션 등 각종 영상매체와 인터넷 활용 등을 통하여 북한생활을 체험해 본 학습자와 교과서에 나타난 문자정보로 북한을 이해한 학습자 사이에는 상당한 학습효과 차이의 차이가 나게 된다.

또한, 통일교육에서 테크놀로지의 활용은 학습자들의 흥미와 호기심을 유발시켜 교육 효과를 높여 줄 수 있다. 따라서 통일교육에서 학습자의 자발적인 참여와 능동적인 학습활동의 전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테크놀로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

바. 지식 구성 활동을 촉진하는 교육

통일교육에서는 학습자들에게 단편적인 지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들의 능동적인 지식 구성 능력을 인정하여 그들의 지식 구성 활동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다. 즉, 학습자를 수동적 존재인 ‘빈 그릇’이 아니라 학습자가 통일 관련 지식을 스스로 구성할 수 있는 능동적 존재임을 고려해야 한다. 학습자의 능동적 지식 구성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 교수는 자율적인 대화와 토론이 이루어지는 학습문화를 형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지도상 유의사항

가. 학교 통일교육

통일교육을 담당하게 될 모든 교사는 무엇보다도 통일문제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열의가 있어야 한다. 즉, 교사는 통일교육이 남북한 동포들 사이에 실질적인 마음의 통일, 그리고 정신의 통일을 이룰 수 있는 가장 확실하면서도 경제적인 투자라는 생각을 지녀야 한다.

통일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들은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하여 통일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학생의 동기와 호기심 유발

제시되는 학습 내용이 학생들과 개인적인 연관성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에 유념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학생들은 새로 배우는 학습 내용이 그들 자신이 궁금해하는 문제를 해결해 주고, 경험할 수 있고, 그들의 관심사나 가치와 관련되고, 그들의 목적에 도달하는 것이라고 믿을 때 학습에 더욱 흥미를 가지게 된다.

교사는 학생들이 통일교육에서 배워야 할 내용이 학생들의 과거, 현재, 미래의 삶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를 알게 해 주어 학생들의 학습동기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야 한다. 즉, 교사는 학생들이 배워야 할 통일교육의 학습 내용이 그들의 실제적인 삶과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가를 보여줌으로써, 학습 주제를 더욱 재미있고 흥미롭게 만들 수 있어야만 한다.

예를 들어, 통일의 의미와 당위성에 대하여 학습할 경우 교사는 학생들에게 ‘분단으로 인하여 여러분 자신은 지금 어떠한 불이익과 제약을 받고

있는가?’ 혹은 ‘통일이 여러분에게 가져다 줄 혜택과 이익은 무엇인가?’와 같은 질문을 던져 학생들이 분단의 실상과 통일의 필요성을 자신들의 삶의 문제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

지적 발달에 있어서 학생들의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지적 흥미를 중시하는 것이 효과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통일교육에서도 북한이나 통일문제에 대한 학생들의 일상적인 질문이나 호기심을 존중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교사는 학생들의 일상적인 질문이나 호기심을 존중해 주는 가운데, 그러한 질문이나 호기심을 해결하기 위하여 학생들이 객관적인 사실이나 정보에 접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

예를 들어, 북한의 경제에 관하여 학습할 경우 학생들은 ‘북한의 식량난이 실제로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라는 질문을 할 수 있다. 이때에 교사는 그런 질문을 수업과 무관한 것으로 여기지 말고, 오히려 그러한 질문을 중시하는 학습 활동을 구조화해야 한다. 따라서 교사는 최근 북한의 식량생산 추이 및 인구동태, 자연재해, 북한식량 생산정책 등에 대한 통계 자료들을 학생들에게 제시해 주거나 학생들과 함께 그러한 자료들을 탐색해 볼 수 있는 활동을 구조화하여야 한다.

또한, 교사는 학생들의 일상적인 질문이나 호기심에서 찾을 수 있는 커다란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학습을 구조화해야 한다. 그러면 학생들은 ‘북한의 식량난’이라는 커다란 아이디어를 통하여 북한의 경제 실상에 대한 지식을 스스로 구성해 갈 수 있다. 따라서 교사는 교과서에 제시된 고정되고 제한된 정보 속에 학생들을 끼워 맞추려는 시도를 하기보다는 학생들의 일상적이고 자발적인 질문이나 호기심을 통하여 학생들 스스로 그러한 질문이나 호기심을 해결할 수 있도록 발판을 제공해 주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2) 생활 관련 소재를 통한 흥미 유도

학생들의 생활과 관련된 친근한 소재를 중심으로 학교 통일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요즘 학생들의 가치 지향은 상당히 현실적이며 사실적이다. 자신의 문제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것에는 흥미를 갖지 않으려는 경향이 짙다. 따라서 통일교육에 대한 접근도 무엇보다 학생들의 일상 생활과 관련짓는 것이 중요하다.

한 예로, 생활문화적 접근에 의한 통일교육 자료로는 북한 학생들의 교우 관계의 특징이나 소년단 활동 등 현재 북한 학생들의 활동에 대해 파악해 볼 수도 있다. 또한, 같은 또래의 북한 학생의 학교 생활, 무엇을 배우는지, 무슨 활동을 하는지를 알아 통일교육에 흥미를 느끼게 할 수도 있다.

이는 학생들의 관심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그들을 통일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시키기 위함이다. 통일교육 프로그램의 초기 단계에서는 학생의 흥미 유발에 중점을 두되, 궁극적으로는 통일에 대한 확신을 실천할 수 있도록 안내되어야 한다.

(3) 협동과 의사소통이 가능한 수업 환경 조성

협동적인 학습은 상호 존중에 바탕을 둔 사회적 상호작용의 기회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민주시민적 자질을 기르게 하는데 매우 유용하다. 또한 사회적 상호작용은 통일문제에 대한 학생들의 지식 구성에 있어서 다양한 시각을 경험하고, 자신이 구성한 지식과 이해의 타당성을 검토해 보는 기회를 제공하여 준다.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하여 학생들은 공감, 역할 채택, 책임, 갈등의 합

리적 해결, 비판적 창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기능과 태도를 익힐 수 있다. 이러한 기능과 태도들은 북한 동포를 배척이나 경계의 대상이 아닌 실질적인 통일의 파트너로서 인식하고, 그들과의 관계를 형성해 나아가는 데 필수적인 사회적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학생들은 갈등 해결을 위하여 여러 주장이나 견해들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가급적 여러 각도에서 조명해 봄으로써 실질적인 민주적 사회적 기술을 체험해 볼 수 있다.

협동적인 학습 과제의 제시는 북한이나 통일에 관한 다양한 의견과 주장이 개인·집단·국가의 각 수준에서 어떤 방식으로 제기되어 절충과 타협이 이루어지며, 마침내 하나의 사회적 합의를 어떻게 이루게 되는지를 학생들이 직·간접적으로 체험해 볼 수 있는 실질적인 기회를 제공해 준다.

통일교육에서 열린 의사소통은 매우 중요한 원칙이다. 교사는 통일에 관련된 획일적인 이념이나 사상 혹은 정책을 학생들에게 주입하려 해서 는 안 된다. 오히려 교사들은 학생들과 열린 의사소통이 가능한 개방적·탐색적·민주적인 학습 풍토를 조성해야 한다.

교사는 통일교육 내용을 학생들이 효율적으로 학습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학생들의 의견을 진지하게 들어야 하며, 학생들 간의 토의와 상호작용을 촉진시켜 주어야 한다.

열린 의사소통에 의해 이루어지는 통일교육에서 교사는 학생들에게 북한이나 통일문제에 관련된 논의의 결론이나 해석을 학생들에게 일방적으로 주입하는 시도를 배제한다. 대신에 교사는 그러한 결론에 이르는 과정과 그 과정 속에서의 다양한 대안이나 관점들에 대하여 학생들이 심사숙고해 볼 수 있는 기회와 활동을 중시해야 한다.

(4) 학습 보조수단의 다양한 활용

학습 보조수단이란 학습을 좀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며 만족스럽게 만들기 위하여 고안된 장치나 기법을 의미한다. 학습 보조수단은 복잡한 내용을 단순화하고 조직화하며, 이미 알고 있는 내용과 새로운 내용을 연결해 준다. 또한 학습 보조수단은 주의를 집중시키며, 학습을 쉽게 하고, 기억을 용이하게 하며, 전이를 돕고, 가르치는 일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교사는 신문 기사, 사진, 그림, 서적, 도표, 삽화, 영상 자료 등과 같은 다양한 학습 보조수단을 활용하여 통일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에 교사는 교육 과정에 제시된 목표와 내용의 구성 취지를 아예 벗어나거나, 편향된 견해만 소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특히, 북한의 영상 자료를 소개할 때 북한의 TV 영상 자료들은 주민에 대한 계도와 선전성이 강하므로 자료의 의미를 잘못 해석할 경우 북한의 실상에 대하여 학생들의 불필요한 오해가 생길 수도 있다. 그러므로 교사는 학생들이 비판적인 시각에서 영상 자료들을 볼 수 있도록 시청 전후에 충분한 지도를 해야 한다.

(5) 적절한 실천 기회 부여

통일교육은 통일문제에 대한 합리적 이해와 통일의지의 함양과 같은 인지적·정의적 학습 경험만으로 완성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학생들은 그러한 이해와 의지를 생활 속에서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 형성시켜 나가야 한다. 따라서 교사는 통일문제에 대해서 학생들이 경험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실제 생활 속에서 학습한 내용을 실천해 볼 수 있는 다양한 실천 기회들을 제공해 줄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남북한의 언어 이질화 현상에 대하여 학습할 경우, 교사는 남북한의 언어 동질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우리 사회가 개선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를 학생들이 실제로 실천해 볼 수 있는 다양한 기회들을 제공해 줄 수 있다. 교사는 학생들이 역할놀이를 통해 남북한 주민이 자주 쓰는 외래어 사용의 문제점을 실연해 보게 하거나, 특정용어가 남북한의 신문이나 교과서에 어떻게 나타나있는지 찾아 비교하게 할 수 있다. 또한 교사는 같은 단어이면서도 남북간에 의미가 전혀 상이한 언어에 대응하는 새로운 공통어를 만들어 보는 창조적인 활동을 학생들이 해 보게 할 수도 있다.

또한 교사는 학생들이 여러 방면에서 북한동포돕기운동에 참여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북한주민돕기운동은 북한주민들을 동포애로서 수용하여 적극적으로 배려해 주는 경험을 할 수 있는 아주 소중한 교육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활동을 통하여 학생들은 통일문제에 대한 자신들의 지식과 태도, 의지 등을 실천에 옮길 수 있게 된다.

나. 사회 통일교육

(1) 자기 주도적 학습의 중시

사회 통일교육은 자기 주도적 학습이어야 한다. 대부분 성인 학습자는 학습자라는 역할 이외에도 대학생, 부모, 직장인, 시민 등 다양한 역할을 담당하는 사회인이다. 성인들은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자발적으로 학습에 참여하기 때문에 성인 참가자의 필요와 관심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학습 과정이 구성되어야 한다.

따라서 성인 학습자에게는 보다 개방적이고 자율성이 존중되는 학습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학습자가 필요로 하고 원하는 학습 목표 및 내용들이 중요하게 다루어지도록 한다. 또한 학습자 스스로 수업을 이끌어 가도록 유도하며, 교수자는 지식의 제공자가 아닌 학습 환경에의 또 다른 참여자로서 존재하도록 한다.

(2) 학습자의 생활 세계와 연계된 교육 실시

학습자의 다양한 경험을 존중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학습자들의 경험은 곧 학습의 자료가 되어 그들의 지각과 학습 기대감의 근간이 된다. 다양하고 풍부한 경험은 학습자가 보다 쉽게 새로운 경험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연결 고리로 작용한다.

특히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 통일교육에서는 학습자의 다양한 직업과 경험을 고려하여 통일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호기심과 관심을 유발시킬 수 있는 대중성 있는 교육 내용과 프로그램이 요구된다. 사회 통일교육에서는 일상적인 생활과 관련된 주제를 선택하는 것이 학습자의 모집이나 학습에 더욱 효과적이다.

그러므로 성인 학습자에게는 단순한 정보 제공의 차원에서 탈피하여 경험을 바탕으로 한 실험적 수업 환경을 제공하도록 한다. 또한 교수자는 성인 학습자가 풍부하고 다양한 경험을 어떻게 수업에 활용할 것인지를 안내하여 학습자가 자기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렇듯 학습자의 경험과 지식을 활용한다는 것은 곧 학습 과정에 적극적으로 그들을 참여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다양한 형태의 발표 및 토론의 기회를 제공하고, 워크숍 등 실험 환경을 마련하며, 상황극과 역할극 등 능동적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3) 통일문제에 대한 다양한 논의의 수용 능력 신장

사회 통일교육은 학습자 자신의 필요나 문제 해결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 아동이나 청소년이 학습을 미래의 삶을 준비하는 과정으로 생각하는 반면, 성인 학습자의 대부분은 현재의 문제 해결 방법을 찾아내는 과정으로 인지한다. 즉, 그들은 보다 직접적으로 자신의 경험이나 환경과 관련 있는 내용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성인 학습자에게는 교수자의 가르침보다는 학습자의 배움에 초점을 맞추어 학습 과정을 구성한다. 그리고 학습 과정이나 학습 후에 공부한 내용을 즉각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되 학습자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한다.

학교 교육에서는 교사와 교과서 등이 권위를 가지며 시간표에 의한 공식적인 체계가 성립되어 있다. 반면 사회 교육에서는 교사와 교과서 등과 같은 중심 권위체보다 교수자와 학습자가 상호 존중하는 분위기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체계로 성립되어 있다. 그리고 시간표도 공식적으로 결정되기보다는 학습자 입장에서 좀더 편리하게 운영되도록 유연하게 관리되고 있다.

또한 성인 학습자에게는 다양한 통일 논의에 대해 비판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학교 통일교육에서는 학생들이 동질적인 집단이고 합의를 이룬 통일교육 교재를 어느 정도 마련할 수 있지만, 사회 통일교육에서는 성인 학습자들이 매우 이질적인 성격을 띠고 있고 합의를 이룬 통일교육 교재를 마련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성인학습자는 다양한 매체로부터 상이한 관점의 정보를 접하기 때문에 이러한 정보들을 비판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을 경우 큰 혼란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4) 지도자로서의 역할 수행 기회 제공

사회 통일교육은 지도자로서 역할 수행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성인 학습자는 스스로 책임감을 가지고 사회적 국가적 역할을 수행하고자 노력한다. 따라서 사회 교육에서는 학습 과정에서 학습자 개개인에게 토론의 주제 발표자, 토론의 사회자, 조장 등 그룹 지도자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스스로 책임감을 가지고 효과적인 학습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 나아가도록 해야 한다.

(5) 수강 대상자의 특성에 맞는 통일교육

학교 통일교육의 대상자는 학교급·학년별 차이를 제외하고는 어느 정도 공통된 특성을 지니고 있으나, 사회 통일교육의 대상자는 기관별·성별·세대별로 매우 다양하다. 따라서 사회 통일교육에 있어서는 이들 대상자의 특성에 적합한 교육 자료와 표준 교재를 개발하고 가능한 한 최신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어, 민방위 교육에서는 대상자의 다양한 직업을 고려하여 학습자의 일상적인 생활과 관련되는 ‘북한의 생활 경제’, ‘북한의 직업’ 등과

같은 내용을 구성할 수 있다. 또한 각종 직업 훈련 기관에서는 직업생활을 포함하는 교양 과목을 운영하는 바, 분단으로 인한 남북한 경제의 문제점, 남북한의 직업 생활, 통일 이후 직업 환경의 변화와 같은 내용을 구성할 수 있다.

(6) 특화된 전문성의 확보

일반적으로 사회교육기관은 주로 직무 중심의 교육을 중시하는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전문성을 추구하게 된다. 사회 통일교육기관 역시 특화된 전문성을 중시할 필요성이 있으며 자기 기관의 성격에 맞는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북한이탈주민들을 이해하고 그들의 남한 사회 적응을 도와주는 활동을 강조하는 통일교육, 북한사회의 생활문화에 대한 체험을 통해 북한에 대한 객관적 이해를 촉진하는 통일교육, 북한주민돕기운동 등과 같은 사회적 행동을 강조하는 통일교육, 비평화적 요소의 극복을 강조하는 평화교육, 북한주민의 인권을 강조하는 인권교육, 학습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도록 하는 민주시민교육 등과 같은 특화된 전문성을 확보함으로써 학습자의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어야 한다.

(7) 교육 종료 후의 지속적 관리를 통한 관심 제고

학교 통일교육이 정해진 교육 시기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과 달리, 사회 통일교육에서는 교육 시기의 제한이 없으며, 전 생애에 걸쳐 교육의 대상이 된다.

평생교육의 특징을 지닌 통일교육은 교육 종료 후에도 성인 학습자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관심을 제공해야 한다. 통일교육 전문기관에서 일정시간 통일교육 연수를 받은 대상자에게는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현장체험 교육을 비롯하여, 북한 이탈 주민들과의 만남, 특화되고 전문화된 경험의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해야 한다.